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자료집

2026년 4월 21일(화) 오후 1시
한국세무사회 대강당(6층)



한국세무사회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2026년 4월 21일(화) 오후 1시
한국세무사회 대강당(6층)

프로그램

- 13:00 개회식
- 13:15 행사일정 및 참석자 소개
- 13:20 환영사(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 13:25 사진촬영 및 장내정리
- 13:30 A조 발표
- 14:15 휴식
- 14:25 B조 발표
- 14:25 휴식
- 15:35 C조 발표
- 16:20 심사 및 휴식
- 16:50 경품추첨
- 17:10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한국세무사회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2026년 4월 21일(화) 오후 1시

참가팀 현황

[A조]

- 성장 아웃소싱 연구회 (대구)
AI기반기업생애주기별 세무정보사전제공 7
- 부산갈매기 (부산)
일감몰아주기의 주식가치 영향과 제도개선 방향 연구.....23
- 미래세움 (광주)
미래 세대를 위한 세금·재정 교육 모델 개발.....39

[B조]

- 영실회 (연합)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주요이슈.....49
- 동고양세법탐구자들 (인천(동고양))
세무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기관 참여 방안에 대한 연구 73
- 글로벌글로벌비 (서울(역삼))
종합부동산세 제도 변경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85
- 세금그이상까지 (광주(익산))
장기 기증 등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99

[C조]

- 더피너클(The Pinnacle) (연합)
증여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113
- 전북분회 (광주(전주))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위탁 결산검증의 법적 실체와 수행 주체 다원화 방안 125
- 팀삼성(Team Samsung) (서울(삼성))
로켓랩(RKLB)사태를 통한 해외주식 기업결합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137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발표

SI기반기업생애주기별 세무정보사전제공

성장 아웃소싱 연구회

성장 아웃소싱 연구회

성장아웃소싱연구회는 대구지방회 소속 9명의 세무사가 모여 AI 기반 '기업 생애주기별 세무 정보 사전 제공 시스템'을 연구하는 팀입니다. 이번 세법연구왕 대회 참가를 통해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경영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측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세무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입니다.

대표 세무사



이명주 세무사

성장 아웃소싱 연구회 대표

성장 아웃소싱 연구회를 이끌며 세무 실무와 연구의 가교 역할을 담당합니다. 팀원들과 함께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세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팀원 소개



이명주 세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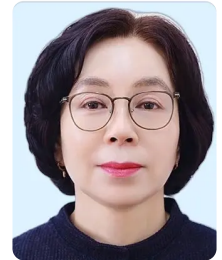
강영수 세무사



김종철 세무사



김준현 세무사



서명숙 세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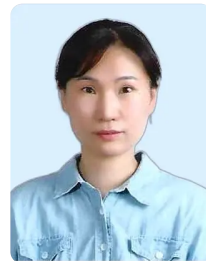
신경우 세무사



신영진 세무사



한채모 세무사



홍성경 세무사





착안 사항

- # 제목 : 마이너리티 리포트
- # 주연 : 톰크루즈
- # 개봉 : 2002년
- # 내용 :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범죄를 예측하여 범인을 체포하는 시스템이 존재



- # 'AI 기반 세무정보 사전제공 시스템' 연구
- # 기업생애 주기별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예측
- # 고객에게 최적을 솔루션 제공

AI 기반 기업생애 주기별 세무정보 사전제공 연구개요



성장
아웃소싱
연구회

연구회원 강영수, 김종철, 김준현, 서명숙, 신경우, 신영진, 이명주, 한채모, 홍선경

연구목적 본연구회에서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세무, 회계, 노무, 법무, 인사, 자금**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모아** 사업진행 과정에 놓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고객에게 사전제공**하고, **세무사**는 고객에게 부가가치 높은 컨설팅 제공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여 세무사 황금시대 도래에 기여함이 목적임

장 소 대구지방세무사회 지하1층 회의실

기대성과

통합컨설팅 플랫폼

세무사 중심으로 변호사 등 전문가네트워크를 연계하여 고객관리를 총괄하는 **통합컨설팅플랫폼** 기능을 하여 세무사의 입지 강화

추가적 수익창출

체계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컨설팅 서비스 제공하여 기장료, 조정료 외 **추가수익창출** 및 잠재고객 유치에 도움

세무사 위상제고

세무 외 노무, 법률 등 기업 운영전반을 **적시에 폭넓게 제공**하는 종합컨설팅 역할 수행으로 고객의 세무사에 대한 위상제고

목차

AI 기반

01 연구배경

1. 급변하는 경영환경 대응
2.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역 침해 대비
3.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4. 고객-세무사의 동반성장 실현

02 기업생애 주기별 위험예측 시스템

1. 스타트업 (세무, 노무, 법률, 기타)
2. 성장기업 (세무, 노무, 법률, 기타)
3. 성숙기업 (세무, 노무, 법률, 기타)
4. 중년기업 (세무, 노무, 법률, 기타)
5. 노년기업 (세무, 노무, 법률, 기타)

03 생애 주기별 이벤트

1. 스타트업 (신규창업 위험예측 외)
2. 성장기업 (부동산취득 위험예측 외)
3. 성숙기업 (법인전환 위험예측)
4. 중년기업 (주식거래 위험예측 외)
5. 노년기업 (가업승계 위험예측 외)
6. 상담사례 및 실무적용

04 기대 성과

1. 추가적인 수익창출
2. 전문자격사로서의 자긍심 고취
3. 통합컨설팅 플랫폼 구현
4. 정부의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 설계

01. 연구배경



급변하는 경영환경 대응

- ❖ 현대기업은 기술발전과 시장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
- ❖ 기업의 변화와 요구에 신속히 대응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역침해 대비

- ❖ 변호사, 행정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세무대리 업무 진출
- ❖ 업역 침해에 대비한 차별화 및 전문성 부각



전반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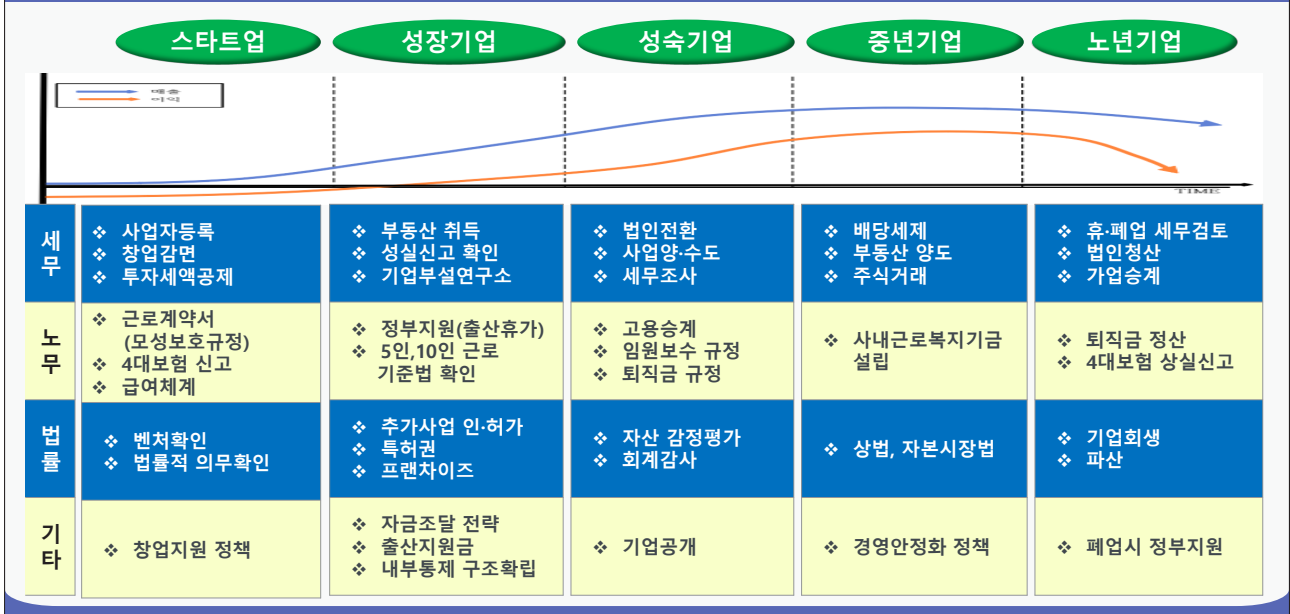
- ❖ 기업경영에 필요한 세무, 회계, 노무, 법무 등 경영전반 필요 정보 시스템 구축
- ❖ 기업운영 전반적 관리에 사전정보 제공



고객-세무사의 동반성장 실현

- ❖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미리 예측하여 대응책 제시
- ❖ 사전정보 제공과 예방적 컨설팅으로 고객과 세무사의 동반성장 실현

02. 기업생애 주기별 위험예측 시스템



03. 생애 주기별 이벤트 - 주기별 경영이슈

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 ❖ 신규창업 위험예측 시스템 ❖ 사업주가 알아야할 모성보호규정 ❖ 중증운영에서 나타나는 과세검토 	성숙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전환 시 검토사항 ❖ 부동산가족법인 설립,운영시 주의사항
성장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부동산 취득,보유,양도시 검토사항 ❖ 특허권 관련 주의사항 ❖ 프랜차이즈 관련 주의사항 ❖ 출산휴가시 사업주 정부지원금 신청 	중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취득, 보유, 양도에 따른 과세검토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검토
		노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상속공제 시 주의사항 비교 ❖ 개인사업자 폐업 시 위험예측 시스템

03. 생애 주기별 이벤트 - 연구방법

AI 의견

1

성장아웃소싱연구회 의견

2

Our Team

종합의견

AI 의견

+

성장아웃소싱연구회 의견

03. 생애 주기별 이벤트

14개 주제별
1장씩 요약

스타트업 1. 신규창업 위험예측 시스템

구분	AI 의견			성장아웃소싱 연구회 의견	종합의견
	플랫폼세무사회AI	Gemini	ChatGPT		
창업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최초 창업 감면대상 업종 확인 18개 업종 실제 매출 업종 기준 인적용역사업자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업종 가능업종 확인 불가능 업종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요건 중소기업일 것 창업에 해당할 것 감면대상 업종일 것 지역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표준산업분류표(세분류) 업종 확인 동신평매업 주의 오래된 도매 제조, 오프라인 소매 추가 인텔 결합시 구분 경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최초 창업 감면대상 업종 확인 : 실제매출 발생업종이 기준, 인적용역 사업자도 적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부류에 의한 업종 확인 동신평매업 주의(오래된 도매제조, 오프라인 소매 추가 인텔) 결합시 구분 경리
창업배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동일유사업종 경영 이력 없음 폐업 후 재창업-합병 법인전환 사업 확장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불인정 사업승계 및 인수 법인전환 재창업 업종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으로보지않는 경우 기존사업을 양수 (30%기준) 분할-합병 법인전환 업종만 바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 추가 대신 신규 사업장 개설 사업개시 당시 업종추가, 지정추가해서 매출 발생 시킬것 개인이 법인신설, 법인이 법인신설시 기준거래처, 직원승계, 지분을 검토 대표자 변경 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으로보지않는 경우 기존사업을 양수(30%기준), 분할-합병 법인전환, 업종만 바꾼 경우 업종 추가 대신 신규 사업장 개설 사업개시 당시 업종추가, 지정추가해서 매출 발생 시킬것 개인이 법인신설, 법인이 법인신설시 기준 거래처, 직원 승계, 지분을 검토 대표자 변경 유의
감면율 및 기간	<p>〈사업개시일 기준 5년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창업중소기업 수도권 등 외 100% 수도권 등 75% 일반 창업중소기업 수도권 외 인구감소지역 50% 수도권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및 지역요건 청년기준 15~34세 (군필자 최대 만40세) 감면을 표 청년, 일반, 생계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면 내용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율 : 50~100% 감면기간 : 최초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 기준이 아니라 소득기준 사업 초기 손실 인정 알것 사업자등록 전 매출발생 여부 확인 수도권내 지정 설치 주의 병적증명서 확인(최대 6년) 청년이 단독 대표이사가 되어야 함 회득세 등 지방세 감면 	<p>〈사업개시일 기준 5년간, 청년:15~34세(군필자 최대 만40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등 외 100%, 수도권 등 50~100% 일반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외, 인구감소지역 50%, 수도권 25% 광고대행업 등 신성장서비스업 : 75% 매출 기준이 아니라 소득기준 : 사업초기 손실 인정 알것 사업자등록전 매출발생 여부 확인 수도권내 지정 설치 주의, 병적증명서 확인(최대 6년) 청년이 단독 대표이사가 되어야 함, 회득세 등 지방세 감면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면특례 소규모창업, 고용증대 감면한도(연간 5억) 다른 공제 감면과 중복 적용 확인 노동세, 최저임세 확인 통계조사 사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 사항 업종유지 사업장 이전 대표자 변경 중복 불가 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 주의할 점 창업시점 판단 주입종코드가 중요 감면신청은 자동이 아님 사무관리 중요 증빙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후 창업벤처 기업 감면(감면 최대화) 소규모창업 연간매출액 한도초과 관리 창업 후 고용증가시 추가 감면 확인 지방세 감면은 국세와 업종등 차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면특례 : 소규모창업, 고용증대, 감면한도(연간5억) 다른 공제 감면과 중복적용 확인(동일고용세액공제 등 불가) 노동세, 최저임세 확인, 통계조사 사전 확인 업종유지, 사업장 이전 유의, 대표자 변경 유의 창업시점 판단, 주입종 코드가 중요 감면신청은 자동이 아님, 증빙보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후 창업벤처기업 감면(감면 최대화) 소규모창업 : 연간매출액 한도초과 관리 창업 후 고용증가 시 : 추가 감면 확인 지방세 감면은 국세와 업종등 차이 있음

03. 생애 주기별 이벤트 - 스타트업(사업자등록)



03. 생애 주기별 이벤트 - 스타트업(창업감면)



03. 생애 주기별 이벤트 - 스타트업(모성보호)

휴가일수 확대

- ✓ 난임치료 휴가 : 휴가일수 확대 3일 → 6일
-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 36주 → 32주 이후
임신후 12주 이내 or 32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신청
1일 2시간 이내 근로시간 단축 허용

- ✓ 자녀조건 : 만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휴직기간 : 1년 이내(3회 분할사용 가능)
- ✓ 급여지급 : 6월까지 통상임금의 100%
7월초과 통상임금의 80%
(개정) 25% 직장복귀 6월후 지급 폐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 ✓ 휴가기간 : 10일 → 20일(유급, 토,일요일 제외)
- ✓ 사용기한 : (개정 전) 출산일부터 90일 이내
(개정 후)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 ✓ 분할사용 : 1회 → 3회
- ✓ 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 : 90일 → 100일

- ✓ 자녀조건 : 초등 2학년이하 → 초등 6학년 이하
- ✓ 사용가능 기간 : 2년 → 3년
- ✓ 최소 사용단위 : 3개월 → 1개월 단위
- ✓ 근로시간 단축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5년개정

03. 생애 주기별 이벤트 - 성장기업(부동산 취득)

취득 전

- ✓ 취득세 증가여부(부동산 종류, 위치, 취득목적 등)
- ✓ 증여세 리스크 검토(특수관계자간 거래여부)
- ✓ 자금출처조사 대상 여부(취득자금 출처)
- ✓ 대출한도, 자본금 설정,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등

- ✓ 임대업관련 세제강화
 - 과표 200억 이하 19% 적용
 -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배제
 - 중소, 중견기업의 세제지원 제외
- ✓ 중부세 기본공제(9억) 적용 안됨

보유

취득(증과여부)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건물 신증축) : 건물 2.8% → 6.8%
토지 4.0% → 8.0%
- (공장 신증설 증과) : 공장 2.8% → 8.4%
토지 4.0% → 12.0%
- ✓ 법인의 주택취득 증과 : 12%

- ✓ 재평가된 자산이 있는 경우 취득가액 확인
-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주택 및 별장) 20% (비사업용 토지) 10%
- ✓ 양도세 비과세, 장특공제, 기본공제 적용x

매각

위험예측

03. 생애 주기별 이벤트 - 성장기업(프랜차이즈)

상표권 확보	상표권 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자체가 핵심자산 → 상표권 안정적 확보 ✓ 가맹본부의 사업방향 검토 → 상표권 권리범위 설정 ✓ 가맹사업법 요건 심층 검토 → 법적 리스크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명의 아닌 프랜차이즈 법인 명의로 출원 ✓ 중소벤처기업부 프랜차이즈가맹사업정보시스템 정보공개서 작성 및 제출 ✓ 가맹계약서의 법적 검토로 사업의 공신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경영컨설팅업에 따른 세금감면 효과 검토 → 창업감면, 고용중대세액공제 상호 비교 ✓ 메뉴, 브랜드개발 비용 : R&D 세액공제 ✓ 가맹금 예치계좌 개설, 가맹점 피해보상보험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영점 3개 이상 운영실적 확보(개정) → 실적미달 시 정보공개서 등록 불가 ✓ 매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과태료 대상) ✓ 직원, 가맹점의 권리귀속, 사용범위 명확히 규정
TAX 검토	가맹점 관리

위험예측

03. 생애 주기별 이벤트 - 성숙기업(법인전환)

설립 절차	설립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대상 자산 검토 → 자산평가(시가반영) 등 ✓ 법인전환 비용검토 → 회계감사, 감정평가, 결산비용 ✓ 금융기관, 채권자 부채이전 동의 받을 것 ✓ 유한회사 설립검토 → 절차 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부동산이 없는 경우 → 신규법인 설립 ✓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 경우 (소규모사업) 포괄 양수도 법인전환 (대규모사업) 현물출자 법인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법인설립, 일반 사업양도 → 절차간단, 세금부담이 کم ✓ 현물출자 → 절차복잡, 세금절감 ✓ 포괄양수도 → 조특법상 요건충족 시 세금이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분야 →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소유권 이전 → 부동산 등 30일내 취득세 신고 ✓ 노무분야 → 근로계약서 재작성, 4대보험 변경 ✓ 사후관리 → 이월과세 적용시 사후관리 요건준수
장 · 단점	설립후 체크

위험예측

03. 생애 주기별 이벤트 - 중년기업(주식거래)

거래 전	보유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주식 취득 : 상법상 요건충족 여부 → 요건 불충족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리스크 발생 ✓ 비상장주식 : 특수관계인 간 불공정 거래여부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장주식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 시 →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검토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요건 충족 사전준비 ✓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세부담최소화 증빙확보)
위험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시 주식종류별 예정신고 기간 상이 → 주식종류 판정에 유의 ✓ 양도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 증여 후 1년 경과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주식 : 확정신고 ✓ 상장,비상장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말 ~ 2월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특정주식 → 양도월의 말일 ~ 2월
양도 시	신고기한

03. 생애 주기별 이벤트 - 중년기업(근로자 복지)

기업(사용자) 혜택	근로자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이후 출연금 : 100% 손금산입 ✓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금법인 출연시 10% 세액공제 ✓ 협력중소기업의 기금법인 출연금: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 ✓ 대기업이 기금법인 지원 : 동반성장지수 가점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에서 받은 금품 → 증여세 면제, 소득세 및 4대보험 부과대상 x ✓ 생활안정자금대부 통한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 주택구입 임차자금 지원 통한 재산형성 기여
사내근로 복지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받은 재산 증여세 비과세 ✓ 피상속인이 기금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비과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자소득 100%, 그외 50%) → 미사용 잔액 기금원금 전입시 손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조정 : 직전년 순이익의 5% 기준(조정가) ✓ 출연시기 : 출연결정이 있는날 ~ 30일 이내 ✓ 출연가능 재산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 → 채무가 있는 재산은 출연불가
기금법인 혜택	기금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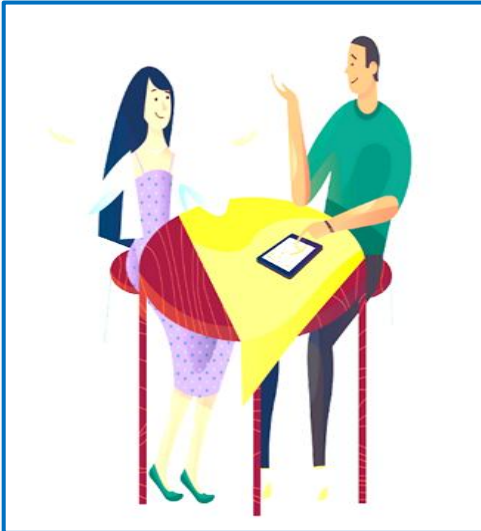
03. 생애 주기별 이벤트 - 노년기업(가업승계)

가업 요건	가업상속공제 : MIN(①,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대분류) 주된 사업 영위 ✓ 피상속인이 주된 업종 변경x 10년 이상 계속 경영 ✓ 중소기업: 자산총액 5천억 미만, 매출액, 독립성 기준충족 ✓ 중견기업: 직전3년 평균매출 5천억미만, 독립성 기준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가업상속 재산가액 (법인사업) 주식가액 x (1-업무무관자산비율) (개인사업) 가업에 직접사용 자산 - 담보채무 ✓ ② 한도액 : 300억 - 600억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00; border-radius: 50%; width: 60px; height: 6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div style="text-align: left; padding-left: 5px;"> <p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위험예측</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용 자산 40%이상 처분(임대) ✓ 상속인 대표이사 미중사, 주된 업종 변경, 1년 이상 휴업 ✓ 상속인의 지분감소 ✓ 5년간 정규직 사원(총급여) 전체평균이 상속개시 직전 2년 평균의 90%에 미달
업무무관자산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업용 토지 등, 임대부동산 ✓ 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 과다보유 현금(상속개시일 직전5개연도 평균현금보유 150%초과) ✓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보유하는 주식, 채권 등 	

03. 생애 주기별 이벤트 - 노년기업(폐업)

폐업 전	TAX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수금, 미지급금, 재고, 비품 등 확인 ✓ 폐업신고 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마무리 ✓ 사업장 원상복구 등 임대차 계약 정리 ✓ 가지급금, 가수금 등 정리, 인허가사업 폐업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 확정신고 : 폐업시 잔존재화 확인 ✓ 종소세 신고 : 손실도 신고(15년간 결손금 이월공제) ✓ 공제, 감면세액 확인 → 임투, 통합고용세액공제 (2년내 처분 여부) → 창업, 벤처기업 취득세 (2년내 처분 시 추징)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00; border-radius: 50%; width: 60px; height: 6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div style="text-align: left; padding-left: 5px;"> <p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위험예측</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철거비 지원) ✓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 : (기존) 기타소득 → (2025.10월 유권해석) 비과세 전환 ✓ 의료기관 : 의료비세액공제 자료 국세청 제출
노무 체크	폐업자 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보험 상실신고 : 퇴사일~15일 이내 ✓ 근로계약 종료 통보 : 30일 전 ✓ 퇴직금 지급 및 원천세 신고 ✓ 폐업사실증명원 제출(보험료 조정) 	

03. 생애 주기별 이벤트 - 상담사례 및 실무적용



고객 요청

- ✓ 최근 제조업 영위 고객사와 상담
- ✓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대함
- ✓ 2026년은 세계경제 불안으로 매출변동폭 클 것으로 예상
- ✓ 세금 및 다른 관련 규정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음

상담 결과

- ✓ 매출 감소 or 증가 하였을 경우
- ✓ 세금과 다른 관련 규정 검토
- ✓ '위험예측 컨설팅 보고서' 작성
- ✓ 대비책을 같이 고민함으로써 고객과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함

매출 변동에 따른 위험예측 컨설팅 보고서

구분	매출 감소 (80~100억)	매출 증가 (100~120억)
매출		
T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감소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추가납부액 계산 ❖ 유휴설비 처분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추정 대상 검토 ❖ 유휴시설 임대 시 지방세특별법상 창업중소기업감면, 취득세 감면 취소 검토 ❖ 결손금 발생시 결손금 소급공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 소기업 → 중기업 전환 시 감면을 축소 검토 ❖ 고용이나 투자 증대시 관련 세액공제 검토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에 따른 세액공제 검토 ❖ 배당 관련 세금 및 절차 검토
TAX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으로 인한 대출금리 인상 및 대출금 회수 위험성 검토 ❖ 근로자 해고에 따른 고용지원금 축소 등 검토 ❖ 증자, 대출 등 자금조달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대비 : 재고자산,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 주식평가 : 주식이격 상승 전 가업승계 또는 지분정리 필요 ❖ 근로자 증가에 관련 규정 검토 → 근로기준법(5인 이상), 중대재해법 (5인 이상), 장애인 고용법(50인 이상)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검토

04. 기대성과

- 1 추가적 수익창출
- 2 전문자격사로 자긍심 고취
- 3 통합컨설팅 플랫폼 구현
- 4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설계

생애주기별 위험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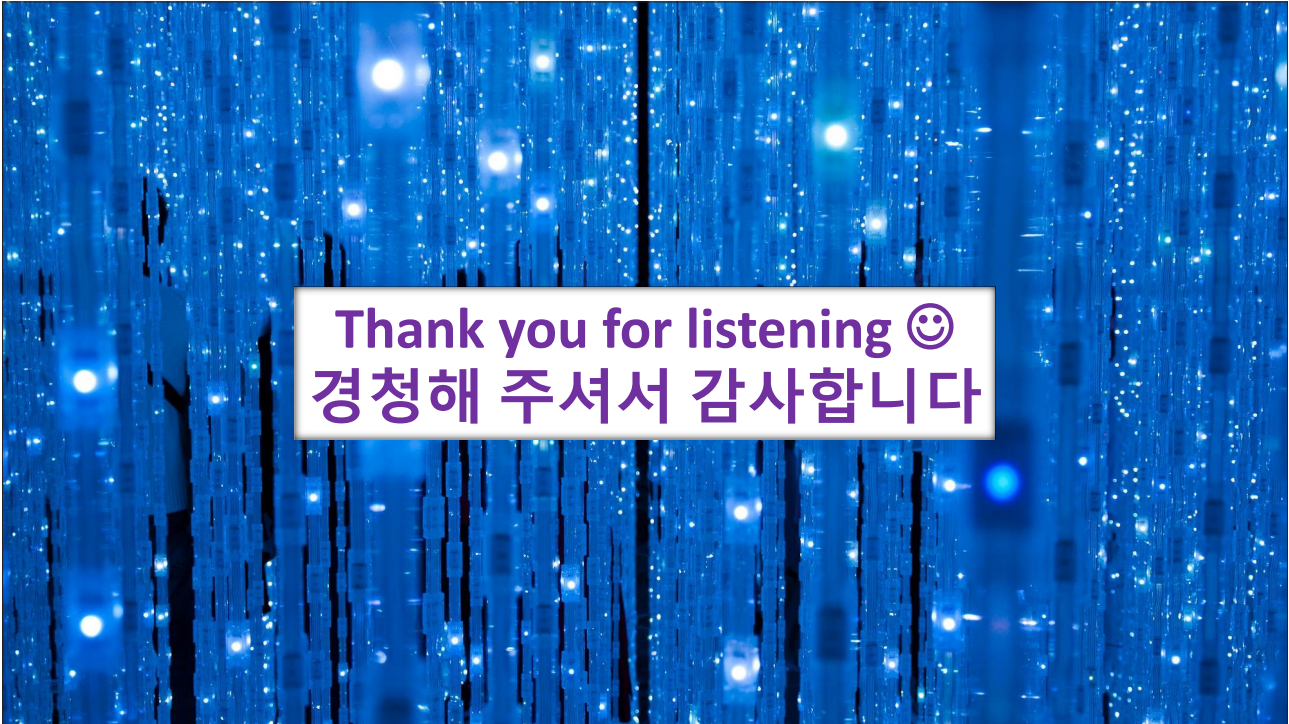
왜

필요할까?

예방적
통합
컨설팅

고객
세무사
동반성장

세무사
황금시대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발표

일감몰아주기의 주식가치 영향과 제도개선 방향 연구

부산갈매기



한국세무사회

부산 갈매기

부산갈매기는 부산 지역 세무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연구팀으로, 일감몰아주기가 기업 주식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탐구합니다. 현장 경험과 데이터 분석을 결합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투명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과 실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 성과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대표 세무사



양은진 세무사

부산 갈매기 대표

부산갈매기팀을 이끌며 실무 세법 연구와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세법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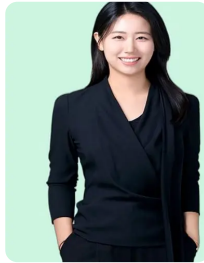
팀원 소개



양은진 세무사



김대현 세무사



하유정 세무사

일감몰아주기의 주식가치 영향과 제도개선 방향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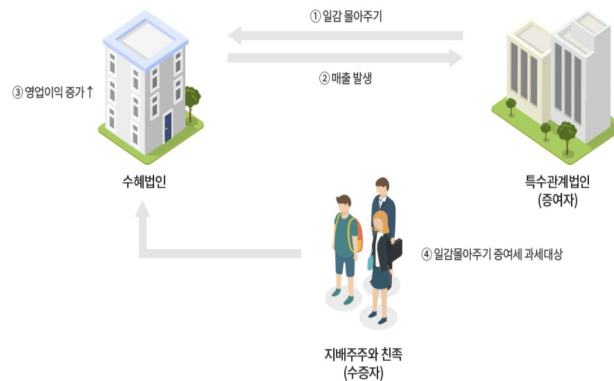
- I. 서론
- II. 선행연구
- III. 실증분석 연구설계와 연구결과
- IV. 일감몰아주기 개선방안
- V. 결론

부산칼매기 양은진 김대현 하유정

2026.04.21

Part I. 서론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 본인·자녀·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

Part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표8> 2019년~2023년 연도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현황

(개, 억원)

기업 유형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액 합계
	법인 수	세액	법인 수	세액	법인 수	세액	법인 수	세액	법인 수	세액	
합 계	1,763	1,414	1,643	2,136	1,507	2,289	1,533	2,644	1,553	1,860	10,343
상호출자	81	679	153	1,666	89	1,616	71	1,484	78	1,441	6,886
일반기업	365	419	276	238	201	408	253	831	177	64	1,960
중견기업	292	158	330	166	295	193	295	153	266	243	913
중소기업	1,025	158	884	66	922	72	914	176	1,032	112	584

· 자료 : 국세청 제출자료, 최기상 의원실 재구성

- 5년간(2019-2023)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납부액 약 1조 343억원 발생
- 연구 목적: 일감몰아주기가 기업가치(PBR)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개선 방안 탐색

3

Part I . 서론

2. 연구방법 및 연구의 구성



실증분석 : 일감몰아주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설명

- 2022-2024년 상장기업 7,242개 관찰치를 표본으로 실증분석
- 기업가치 평가지표 : 주가-장부가 (Price-to-Book) 비율
- 일감몰아주기의 대용치(proxy)
: 특수관계자 매입과 비용을 합한 금액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4

Part II. 선행연구

1.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현황

i 코리아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란 한국 상장기업 주식의 가치평가 수준이 유사한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2000년대 초부터 관찰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일컫는다.

(김준석, 강소현 2023)

(2012-2021년 기준)

구분	한국	선진국	신흥국	아시아태평양국
주가/장부가 비율	1.2	2.2	2.0	1.7
주가/수익 비율	17.0	22.2	21.3	20.4

5

Part II. 선행연구

2.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

1



**미흡한
주주 환원 수준**
Insufficient
Shareholder Returns

한국은행(2025) :
주주환원과 기업가치간(+) 관계

2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Weak Corporate
Governance

Ducret & Isakov (2020)

3



**저조한 수익성
및 성장성**
Low Profitability
And Growth

왕수봉 외 (2025) :
성장동력의 부재

4



회계불투명성
Accounting
Opacity

허강성 외 (2024)

6

Part II. 선행연구

3.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납세의무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개인 대주주

과세요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 비율의 30% (40%, 5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이익의 계산방법
세후영업이익은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서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고 과세매출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이때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매출액-매출원가-판매비 및 관리비)에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7

Part III. 실증분석 연구설계와 연구결과

1. 연구목적 및 가설

일감몰아주기는 터널링(tunneling)의 수단으로,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가 기업가치 하락으로 귀결된다.

1. 연구 목적

- 일감몰아주기가 기업가치(PBR)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특수관계자 거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지 검증
- 과세제도 개선에 대한 실증적 근거 제시

2. 연구 가설

특수관계자 거래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가치는 감소한다.

DUM(IN) ↑ → PBR ↓

표본

2022~2024
상장기업

관심변수

DUM(IN)
일감몰아주기
(더미변수)

종속변수

PBR

분석방법

다중회귀분석

8

Part III. 실증분석 연구설계와 연구결과

2. 연구모형과 변수의 측정

2.1 회귀모형

$$PBR_{i,t} = \beta_0 + \beta_1 DUM(IN)_{i,t} + \beta_2 INV_{i,t} + \beta_3 DEBTLN_{i,t} + \beta_4 ROE_{i,t} + \beta_5 ACC_{i,t} + \beta_6 DUM(DIST)_{i,t} + \beta_7 OWN_{i,t} + \beta_8 IND_{i,t} + \beta_9 YEAR_{i,t} + \epsilon_{i,t}$$

<표2> 변수의 요약

변수명	변수 정의	구분
PBR	주가순자산비율 (Price-to-Book Ratio)	종속변수
DUM(IN)	특수관계자매입+비용/총매출액의 더미변수	관심변수
INV	무형자산의 자연로그값	통제변수
DEBTLN	부채비율의 자연로그값	통제변수
ROE	자기자본이익률 (Return on Equity)	통제변수
ACC	총발생액 절대값의 자연로그값	통제변수
DUM(DIST)	현금배당금/보통주자본금의 더미변수	통제변수
OWN	대주주 소유주식비율	통제변수
IND	산업더미변수	통제변수
YEAR	연도더미변수	통제변수

9

Part III. 실증분석 연구설계와 연구결과

3. 표본 선정 및 자료수집

<표본의 산업별 구성>

업종	데이터 수	비중
음식료품제조	252	3.48
담배제조	3	0.04
섬유, 의복, 가죽제품제조	154	2.13
목재, 종이, 인쇄업	93	1.28
석유정제, 화학제품제조	519	7.17
비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	541	7.47
고무, 플라스틱제품제조	156	2.15
비금속광물 및 1차금속제조	355	4.90
2차금속제품, 의료정밀기기용	2,168	29.94
자동차, 가구, 기타제조	483	6.67
전기, 가스, 수도사업	118	1.63
건설업	347	4.79
도소매 및 유통업	545	7.53
운송, 항공	203	2.80
통신, 금융, 보험업	211	2.91
바이오, 과학기술서비스	595	8.22
기타서비스업	499	6.89
합계	7,242	100

<표본선정>

대상

: 2022년-2024년간 한국거래소와 코스닥에 상장된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1)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12월말 결산법인
- 2) TS2000에서 재무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기업
- 3) 자본 잠식이 없는 기업



총 7,242개의 기업-연도 관측

(표준화잔차를 중심으로 전체 표본의 1%를 초과하는
데이터는 이상치로 보아 분석에서 제외)

10

Part III. 실증분석 연구설계와 연구결과

3. 표본 선정 및 자료수집

<변수의 평균값과 표준화잔차>

변수	평균	표준화잔차	N
PBR	2.59	6.33	7242
DUM(IN)	0.24	0.43	7242
INV	7.11	2.07	7242
DEBTLN	3.82	1.07	7242
ROE	1.76	23.43	7242
ACC	8.95	1.77	7242
DUM(DIST)	0.42	0.49	7242
OWN	40.21	16.16	7242
YEAR=2022			7242
YEAR=2023			7242
YEAR=2024			7242

<변수의 정의>

PBR : 주가와 장부가 비율
 DUM(IN) : "특수관계자매입 / 총매출액"의 더미변수
 INV : 무형자산의 로그값
 DEBTLN : 부채비율의 로그값
 ROE : 자본정상이익율
 ACC : 총발생액 절대값의 로그값
 DUM(DIST) : "보통주현금배당금 / 보통주자본금"으로 측정된 더미변수
 OWN : 대주주 소유주식비율
 IND : 산업더미
 YEAR : 연도더미

11

Part III. 실증분석 연구설계와 연구결과

4. 실증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

<모형적합도 표시>

통계량	값	해석
R ²	0.181	모형의 설명력 18.1%
Adjusted R ²	0.18	수정된 결정계수
Durbin-Watson	1.741	자기상관 문제없음
F 값	80.271	유의확률 <.001

- 모형의 적합도를 표시하는 R-squared(0.181)는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이 PBR의 변동을 약 18% 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Durbin-Watson 지수는 1.741로서 자기상관 문제없음을 보여준다.
- F값과 p값을 살펴보면, 모형이 종속변수를 잘 설명하며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12

Part III. 실증분석 연구설계와 연구결과

4. 실증분석 결과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 결과 집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화오류	베타	t		공차	VIF
(상수)	1.824	0.487		3.747	<.001		
DUM(IN)	-0.766	0.184	-0.052	-4.153	<.001	0.806	1.241
INV	0.173	0.041	0.057	4.236	<.001	0.705	1.418
DEBTLN	0.389	0.071	0.065	5.495	<.001	0.886	1.129
ROE	-0.069	0.003	-0.255	-21.374	<.001	0.885	1.13
ACC	-0.072	0.048	-0.02	-1.501	0.133	0.705	1.418
DUM(DIST)	0.035	0.169	0.027	1.507	0.123	0.763	1.311
OWN	-0.022	0.005	-0.057	-4.802	<.001	0.893	1.12

13

Part III. 실증분석 연구설계와 연구결과

5. 연구 결과해석 및 결론

1. 계수의 방향성

DUM(IN)의 계수가 음수(-0.766)로서, 음(-)의 관계를 예상했던 당초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매입비율이 높을수록 일감몰아주기가 있는 기업의 PBR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 통계적 유의성

p값이 0.001보다 작은 수치를 나타내어 매우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모든 통제변수와 연도/산업의 효과가 일정할 때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기업(DUM(IN)=1)은 일감몰아주기를 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PBR이 0.766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일감몰아주기와 기업가치간 관계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3.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

무형자산(INV)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값을 나타내었다. 무형자산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평가를 받음을 알 수 있다. 부채비율(DEBTLN)도 계수 0.389(p<.001)로 양의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적절한 수준의 레버리지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배당금(DUM(DIST))은 계수 0.035로 양(+의 방향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4

Part III. 실증분석 연구설계와 연구결과

5. 연구 결과해석 및 결론

4.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대주주 소유비율(OWN)은 계수 $-0.022(p<.001)$ 로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대주주의 높은 지분율이 소수주주 입장에서 기업가치 평가를 낮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실증연구의 결론

이 연구는 일감몰아주기가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초기 가설을 명확하게 입증했다.
DUM(IN) 변수의 높은 유의성($p<.001$)과 예상된 방향의 계수(-0.766)는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매입이 시장에서 기업의 신뢰도와 가치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투명성 문제와 연결되어 투자자들의 평가를 낮추는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확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5

Part IV. 일감몰아주기 개선방안

1.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문제점

- ① 자기증여 논란
- ② 이중과세 가능성
- ③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 ④ 과세요건 및 계산방식의 복잡성

16

Part IV. 일감몰아주기 개선방안

2. 세법 규정의 구체적 개선 방안

① 규제 회피 차단을 위한 지분율 요건 강화

항목	현행(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	개정안	개정 사유
지배주주 지분율	상장법인 30%, 비상장법인 20%	모든 법인 20% 초과 (단일화)	29.9% 등 미세 조정을 통한 규제회피 차단 및 형평성 제고
간접 지분 계산	지배주주가 직접 보유한 지분 위주	특수관계인을 통한 간접 지분합산 강화	지주회사나 자회사를 이용한 우회터널링 방지

17

Part IV. 일감몰아주기 개선방안

2. 세법 규정의 구체적 개선 방안

② 자기증여 및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산식 조정

항목	현행(동법 제1항 및 제4항)	개정안	개정 사유
증여의 제이익산출	세후영업이익x(거래비율-5%~20%)x(지분율-3%~10%)	(세후영업이익-자기증여분)x(거래비율-5%~20%)x(지분율-3%~10%) (증여법인에 대한 지배주주지분 상당액 차감)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이익에 대한 과세모순(자기증여) 해결
이중과세조정	신고기한까지 배당된 금액만 공제	실제 배당 시점과 상관없이 증여의제 이익 전액 이월공제	미실현이익과세에 따른 배당소득세와의 중복 과세 해소

18

Part V. 결론

1. 상법개정을 통한 내부 견제

다행스럽게도 2025년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한 상법이 개정되었다.

현행	개정 상법
<p>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p>

19

Part V. 결론

2. 공정거래법의 외적 규제강화

- ① 규제 대상 지분율 요건의 단일화 및 하향조정
- ② 규제범위의 수직적 확장(자회사 규제)
- ③ 통행세 거래에 대한 입증책임과 조사 역량 강화
- ④ 사후적 제재를 넘어선 선제적 공시 제도의 내실화

20

Part V. 결론

3. 세법 :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정교한 환수 체계구축

- ① 자기증여 논란 해소를 위한 과세 논리 정립
- ② 이중과세 및 미실현 이득 과세 문제의 합리적 조정
- ③ 우회 터널링 방지를 위한 간접 지분 합산 강화

21

Q&A

감사합니다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발표

미래 세대를 위한 세금·재정 교육 모델 개발

미래세움

미래 세움

미래세움은 광주 지역 세무사 6명이 뜻을 모아 결성한 연구팀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세금·재정 교육 모델 개발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미래를 세워간다'는 이름처럼, 조세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납세문화의 건강한 토대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이번 세법연구왕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대표 세무사



유권규 세무사

미래 세움 대표

미래세움 팀을 이끌며 세무 실무와 연구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팀원들과 함께 세법의 미래를 개척하고 납세자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팀원 소개



유권규 세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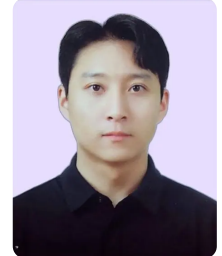
최시라 세무사



임태이 세무사



윤수환 세무사



김시현 세무사



손인선 세무사

미래 세대를 위한 세금·재정 교육 모델 개발

미래세(稅)움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조세 이해도의 현주소와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

조세 인식 현황과 문제점

45%

"각종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편"

성인 남녀 2,400명 대상 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64%

"납부 세금 대비 정부 혜택 낮다"

세금의 효용성에 대한 불만족이 과반을 넘으며, 이는 미래 세대에서 더욱 뚜렷하게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납세의식 조사 (2023)

기존 세법 교육의 3가지 한계점



주입식 이론 교육

자격시험(회계사, 세무사 등) 합격을 목표로 하는 법 규정의 기계적 암기에 치우쳐 있어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현실과 괴리된 자료

복잡한 법전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저하시키며, 세금을 실생활의 소비 및 소득 활동과 연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맞춤형 부재

공급자 중심의 지식 전달로 인해 인지 능력이 형성되는 초등학생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스토리텔링 교육이 전무합니다.

연구의 핵심 목적 및 지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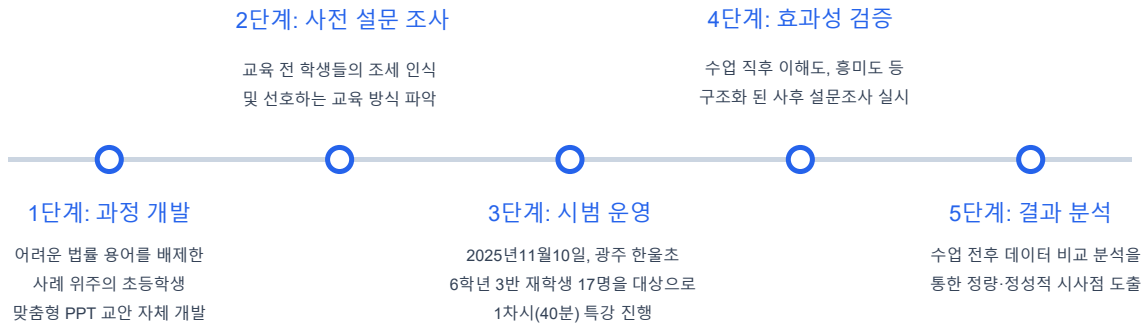
- ✓ **체계적인 조기 교육 제공**
미래의 납세자인 학생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세금 교육을 제공하여 조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합니다.
- ✓ **공동체 의식 함양**
조세가 국가 유지와 국민 복지에 기여하는 필수 요소임을 이해시키고, 건강한 재정 순환 체계의 중요성을 알립니다.
- ✓ **세무사의 역할 고취**
조세 행정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세무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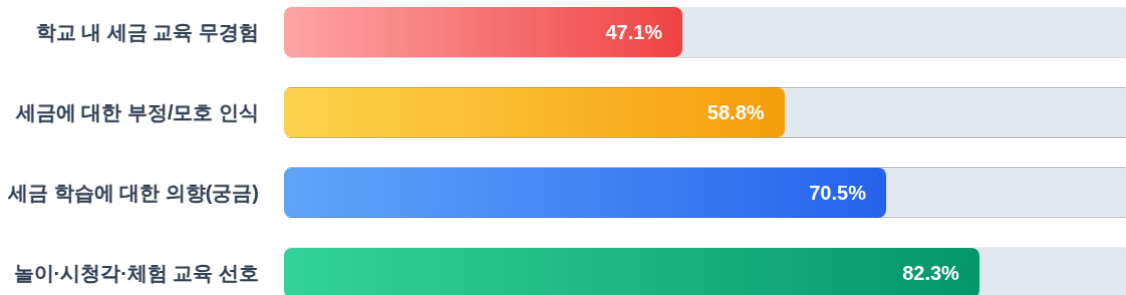
II. 시범운영 및 결과분석

광주 한울초등학교 6학년 대상 맞춤형 교육 실행

시범 운영 5단계 프로세스



사전 설문조사: 교육 전 학생들의 인식 현황



※ 광주 한울초 6학년 3반(17명) 사전 설문 집계
수업 전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세금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어 납세에 대해 모호하거나 귀찮다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70% 이상의 학생이 세금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으며, 딱딱한 설명보다 영상, 퀴즈, 체험 중심의 교육(82%)을 압도적으로 선호했습니다.

학생 맞춤형 커리큘럼 설계



실생활 중심의 스토리텔링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세곡산'과 '대동법' 같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 세금의 기원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내어 학생들의 초기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도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 아이들이 자주 사는 '과자 영수증' 속 부가가치세(VAT)를 직접 찾아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이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쓰이는 '공동체 회비'라는 인식을 효과적으로 심어주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성과 및 인식 변화



※ 긍정 응답("매우 그렇다" + "그렇다") 누적 비율

설문 분석 결과, 텍스트를 벗어난 사례 중심 교육이 학생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전원이 세금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긍정적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음을 입증합니다.

III.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지속 가능한 세금·재정 교육 모델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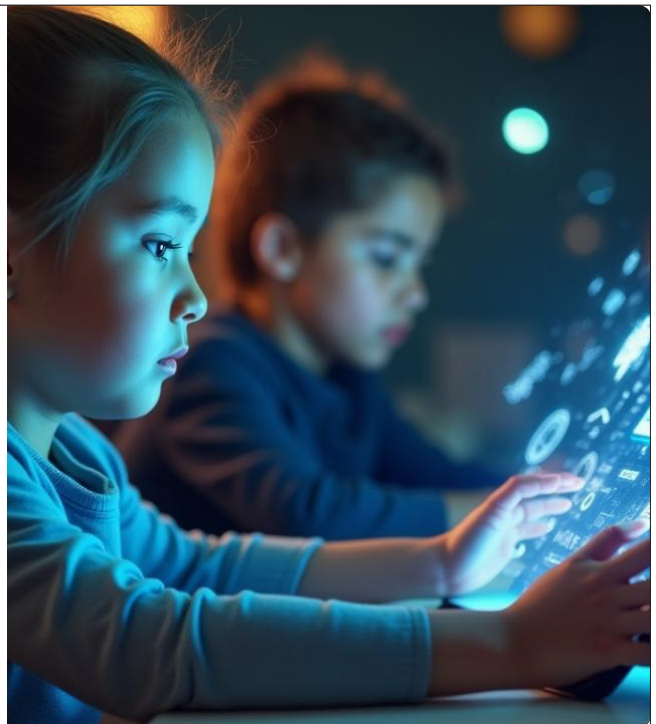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의 확산

맞춤형 매뉴얼 및 에듀테크 도입

일회성 교육의 한계를 넘어, 연령별·대상별 표준 교육 매뉴얼을 개발합니다. 저학년을 위한 '시장놀이' 등 체험형 교구부터 중·고등학생을 위한 '창업과 세금' 등 실생활 연계형 커리큘럼을 구축합니다.

또한, 지역 교육청과의 MOU를 통해 '찾아가는 세금 교실'을 정례화합니다.

더 나아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맞춰 메타버스 가상 세무서 체험 및 유튜브 숏폼 및 웹툰 등을 활용하여 에듀테크를 활용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금 교육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



성실 납세 문화 조성

조기 교육으로 조세를 '공동체 회비'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재정 이해력을 높이고 불필요한 조세 저항을 감소시킵니다.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

단순 대리인을 넘어 국가 재정과 국민을 잇는 전문가로서 세무사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청소년들의 새로운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보 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

학생 대상의 양질의 교육은 가정과 지역 사회로 파급되어, 학부모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세무 인식 상향 평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조세 교육, 세무사가 앞장서겠습니다.

Q & A (질의응답)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발표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주요이슈

영실회



한국세무사회

영실회

영실회는 서울·중부 지역 세무사 8명이 뜻을 함께한 연구팀으로, 자기주식 취득·처분과 관련된 세무 리스크와 컨설팅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이번 세법연구왕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2025년 의무소각 입법안과 상법 개정(2026.3.6. 시행)에 따른 의제 배당 귀속시기, 소득구분 이중구조 등 동시다발적으로 확대되는 세무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4가지 입법·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대표 세무사



김미화 세무사

영실회 대표

영실회를 이끌며 세무 실무와 연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합니다. 팀원들과 함께 세법 발전과 납세자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팀원 소개



김미화 세무사



김명택 세무사



김상익 세무사



문도영 세무사



박정미 세무사



박현규 세무사



유동길 세무사



윤정명 세무사



이명진 세무사



정혜성 세무사

연구보고서 발표자료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과 관련된 주요이슈

자기주식 관련 컨설팅 사례 연구

영실(靈室)회

목 차

- I** 서론
연구 배경 · 문제 제기 · 연구 목적
- II**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
상법 · 회계처리 · 세법 규정 체계
- III**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과세 문제
단계별 흐름 · 핵심 쟁점 3가지
- IV** 조세소송 사례 및 문제점
실질과세 한계 · 대표적 문제점
- V** 최근 주요 이슈 – 의무소각 입법안
입법안 비교 · 주요국 비교 · 세제 영향
- VI** 컨설팅 사례 연구
3가지 실무 사례 분석
- VII** 제언 및 결어
4가지 입법 · 정책 개선방안

왜 지금 자기주식이 이슈인가?

V. 자기주식 관련 최근 주요 이슈

2025년 의무소각 입법(안) 비교 - 3차 입법(안)

차규근의원 외(안)	김남근의원 외(안)	오기형의원 외(안)
대상 모든 회사	대상 상장회사	대상 상장 + 비상장
소각기한 취득 후 6개월 이내	소각기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기한 취득 후 1년 이내
기존 보유분 시행 후 5년 이내	기존 보유분 시행 후 적용	기존 보유분 6개월 유예
예외 사유 제한적	예외 사유 정기주총 승인 + 대주주의 결권 3% 제한	예외 사유 임직원 보상 등 - 주총승인

△ 공통 리스크 : 의제배당 발생 빈도 급증·귀속시기 문제 반복·증여의제 분쟁 확대·세제정비 없으면 조세분쟁 확대 가능

영실회

왜 지금 자기주식이 이슈인가? : 세법관련 의원입법(안)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자기주식 처분 손익은 그 본질이 주식할인발행차금 또는 주식발행초과금과 같으므로,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한 손익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자 함.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1항 1호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자기주식의 취득(거래소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원의 ----- (이하 생략) : 현재시점 개정 되지 않음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주식의 매도가 자산 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 ” 라 하여 사안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보기도 하고, 양도 소득으로 보기도 함. (대법원 2019.6.27. 선고 2026두49525 판결 등 참조)

이에 개인이 자기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은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 하고 **예외적으로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도모 하고자 함. 현재시점 개정 되지 않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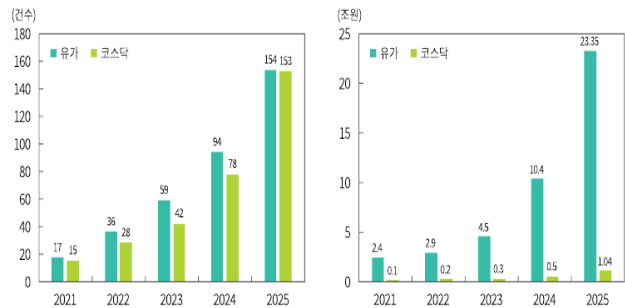
왜 지금 자기주식이 이슈인가? :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보유 및 소각 추이

국내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보유현황 ('25.12월말 기준)

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전체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미보유	192	23.6%	686	38.3%	878	33.8%
5% 미만	406	50.0%	829	46.3%	1,235	47.5%
5% 이상 10% 미만	97	11.9%	173	9.7%	270	10.4%
10% 이상 15% 미만	54	6.7%	56	3.1%	110	4.2%
15% 이상 20% 미만	24	3.0%	25	1.4%	49	1.9%
20% 이상	39	4.8%	20	1.1%	59	2.3%
합계	812	100%	1,789	100%	2,601	100%

자료: FnGuide

국내 상장회사 자기주식 소각 건수 및 금액



주 : 회사가 자기주식 소각 예정으로 공시한 건수와 금액임

자료: DART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은 기업의 성과를 주주와 나누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은 2025년 말 기준 전체 상장회사의 약 66%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행 법제는 취득단계에서는 엄격한 규제와 절차를 부과 하면서도, 처분 단계에서는 주주보호 장치가 미흡하여 주주 간 부의 이전이나 불공정한 지배권 강화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영실회

왜 지금 자기주식이 이슈인가? 상법개정의 핵심

첫째

- 자기주식은 '자산' 이 아님을 명확화
- 담보활용 및 사채발행을 금지
- 처분절차를 신주발행에 준하여 규율

둘째

- 자기주식 보유, 처분에 관한 결정권을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로 이전
- 주주총회가 승인한 계획에 따른 활용은 허용하고, 처분사유는 신주발행과 동일하게 제한.

셋째

-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 (현재 상장법인)
- 불공정 처분에 대한 주주의 유지 청구권 및 무효의 소 인정 (편법적 활용 방지)

넷째

-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도록 허용
-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법령위반방지를 위한 예외 규정 마련

2

V. 자기주식 관련 최근 주요 이슈

주요국 비교와 정책 평가

국가	의무소각	보유 규제	시사점 / 주요 특징
미국(뉴욕, 델라웨어)	없음	자유 보유	소득구분 기준 법령에 명확히 규정 (§302)
미국(캘리포니아)	사실상 의무소각 유사	미발행주식 간주	보유자체 불인정
영국	없음	보유 가능	처분 시 주주우선권 - 강력한 처분 통제
일본	없음	자유 보유	불공정 처분 → 주주 구제수단 중심 사후통제
독일	10% 초과 3년내 처분 의무 미처분 시 소각	10%까지 허용	보유 상한 + 초과 분 관리 - 단계적 규제 모델
한국	1년 내 의무 소각 기존보유분 : 6개월 유예	의무 소각	세제 정비 병행 없으면 조세분쟁 급증 우려

전면 의무소각을 법률로 강제한 국가는 찾기 어려움 - 한국의 의무소각 규정은 국제적으로 가장 강한 규제 수단

영실회

개정상법 규정 : 2026.3.6. 시행

상법 제341조의 4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대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대 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4. 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 처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 2.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 3.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 나.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 다. 발행주식 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 4. 예정된 보유 기간
 - 5. 예정된 처분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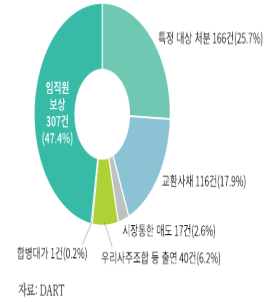
영실회

I. 서론

연구 배경 . 문제 제기. 연구 목적

연구 배경 : 자기주식은 자본정책이면서 복합과세의 출발점

1. 최근 자기주식 보유 자체가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거나 지배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대
2. 상법 개정안에서는 취득 후 1년 내 의무 소각, 기존 보유분 6개월 유예기간 후 1년 내 의무 소각
3. 세법 상으로는 의제배당·양도소득·법인세 손익통산·증여의제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복합 구조



의무 소각 으로 상법개정 이 되어
세무 쟁점 이 동시다발 적으로 확대

문제제기: 핵심은 '소득구분' 과 '귀속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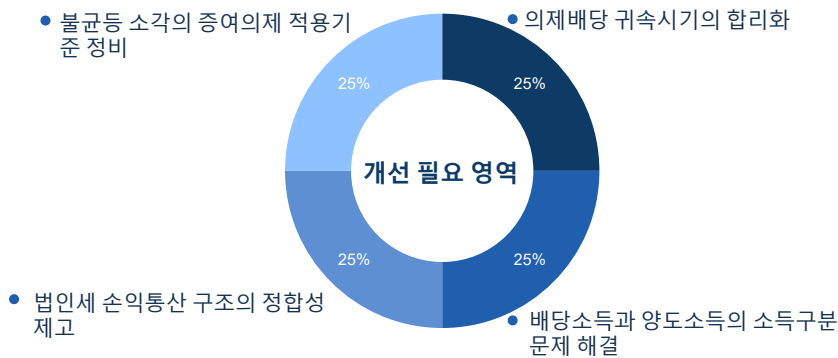
핵심 축	질문	실무상 효과
소득구분	양도소득 인가 의제배당 인가	세율·과세방식·손익통산 구조가 달라짐
귀속시기	양도일 인가 소각결의일 인가	현금흐름과 과세시기 불일치 발생
원천징수	누가 언제 원천징수 하는가	회사와 주주의 인식 차이 및 가산세 위험
법리기준	실질과세로 문언을 뒤집을 수 있는가	조세법률주의와 긴장 발생

문제제기: 핵심은 '소득구분' 과 '귀속시기'



현금흐름은 2023년에 발생했는데 과세귀속은 2025년으로 이동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인의 원천징수 실무를 동시에 흐드는 구조입니다.

연구 목적과 방법 : 4개 개선영역 도출



- 방법론**
- 관련 법령·예규·판례·심판례 분석
 - 입법자료를 통한 제도 변화 평가
 - 실무적으로 실행 가능한 개선안 도출

Ⅱ.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

상법·회계·세법의 연결 구조와 관련 세법 규정 정리

Ⅱ.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

규정 체계의 출발점 : 상법상 자본거래, 세법상 과세거래



영실회

핵심 쟁점 : 의제배당 수입시기 불일치



영실회

핵심 쟁점 : 불균등 소각 증여의제 / 소득구분 이증구조

② 불균등 소각 증여의제	③ 배당 vs 양도소득 이증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주주만 소각 (주주별 조건 상이) 특정 주주 지분을 상승 → 부의 이전 발생 1주당 평가액 차액 30% 이상 또는 증여이익 3억원 이상 <p>핵심: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 + 이사회 의사록 + 증여이익 시뮬레이션 사전 준비 필수</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배당소득 (의제배당)</th> <th>양도소득</th> </tr> </thead> <tbody> <tr> <td>과세방식</td> <td>종합소득 합산 과세</td> <td>분류 과세 가능</td> </tr> <tr> <td>원천징수</td> <td>의무 있음</td> <td>해당 없음</td> </tr> <tr> <td>세율구조</td> <td>누진세율</td> <td>종류/규모별 상이</td> </tr> <tr> <td>손익통산</td> <td>적용 없음</td> <td>적용 가능</td> </tr> </tbody> </table> <p>핵심: 회사 처리 방식(소각 여부)에 따라 주주 세부담이 구조적으로 달라짐 → 과세 증립성 문제</p>	구분	배당소득 (의제배당)	양도소득	과세방식	종합소득 합산 과세	분류 과세 가능	원천징수	의무 있음	해당 없음	세율구조	누진세율	종류/규모별 상이	손익통산	적용 없음	적용 가능	
구분	배당소득 (의제배당)	양도소득															
과세방식	종합소득 합산 과세	분류 과세 가능															
원천징수	의무 있음	해당 없음															
세율구조	누진세율	종류/규모별 상이															
손익통산	적용 없음	적용 가능															

영실회

회계처리와 세법: 소각과 처분은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든다

회계	<p>회계상 자기주식</p> <hr/> <p>회계상 자기주식은 자본 차감항목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는다.</p>	세법	<p>세법상 자기주식</p> <hr/> <p>세법도 원칙적으로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는다.</p>
세법	<p>소각</p> <hr/> <p>소각 거래는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세법	<p>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p> <hr/> <p>제3자에게 매각(처분) 하는 경우, 익금 또는 손금으로 세무조정으로 반영</p>

영실회

관련 세법 규정 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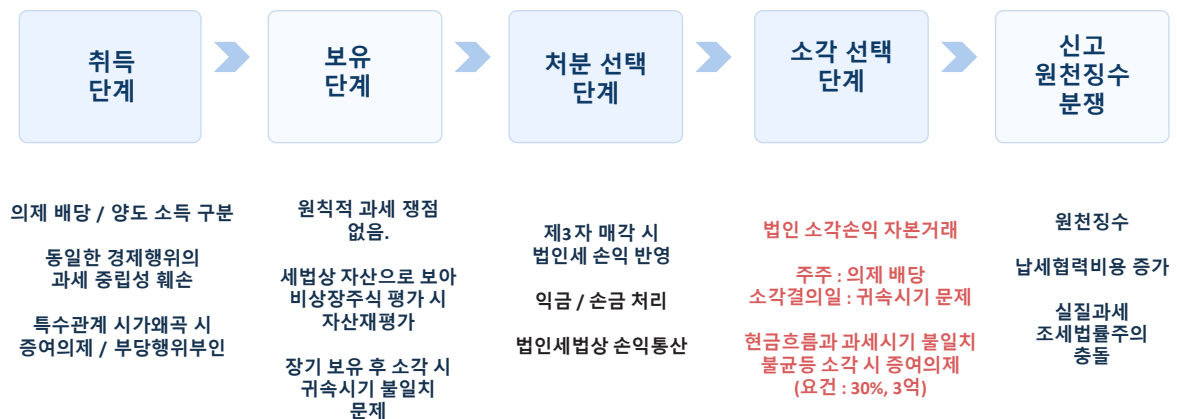
영실회

Ⅲ.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과세문제

취득-보유-처분-소각의 각 단계 과세 구조적 정리

Ⅲ.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과세문제

단계별 흐름: 취득 → 보유 → 처분/소각 → 과세 결과 확정



영실회

단계별 흐름: 취득 → 보유 → 처분/소각 → 과세 결과 확정

“이와 같이 자기주식은 자본거래와 소득과세가 교차하는 영역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예측가능성과 실질과세원칙의 합리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거래 단계별 과세체계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

영실회

법인세와 주주 과세의 분리: 같은 거래라도 보는 관점이 다르다

단계	회사(법인세)	주주 과세	증여세 리스크
취득	원칙적 손익 인식과 무관	의제배당/양도소득 경계	특수관계·시가왜곡시 가능
보유	과세 없음	과세 없음	과세 없음
처분	매각차손익 익금·손금 처리	직접 관련 없음	특수관계자에게 유리한 처분 시 증여의제 / 부당행위 가능
소각	소각손익 익금·손금 불산입	의제배당 발생 가능 수입시기= 소각결의일	불균등 소각 시 적용
의무소각	신고·원천징수 부담 증가	의제배당 과세 발생 빈도 증가 귀속시기, 세부담 집중 문제	불균등 구조 설계 시 분쟁 가능성 증가

영실회

핵심 쟁점 1 : 귀속 시기 불 일치



영실회

핵심 쟁점 2 : 불균등 소각 (증여의제 판단)

No	판단 항목	핵심 기준	위험도	필수 입증자료
1	거래 형태	특정 주주만 소각 / 주주별 조건 상이 여부	높음	소각결의 방식 확인
2	경제적 이익 이전	일부 주주 지분을 상승·가치 증가 발생 여부	높음	소각 전후 지분을 변화
3	가액 기준	① 1주당 차액 30% 이상 ② 증여의의 3억 이상	매우높음	비상장주식 평가
4	특수관계 여부	친족·지배관계 등 특수관계인 포함 여부	높음	특수관계인 범위 체크
5	정당한 사유	경영상 필요·공정가액 거래 여부	중	이사회 의사록 경영전략자료
6	사전 리스크 관리	과세결과 시뮬레이션·소각 일정 분산 설계	핵심	사전 시뮬레이션

영실회

핵심 쟁점 3 : 배당소득 vs 양도소득의 이중 구조

“형식상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는 행위는 양도소득 과세 대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법은 의제배당 규정을 통해 배당소득으로도 포섭하는 이중구조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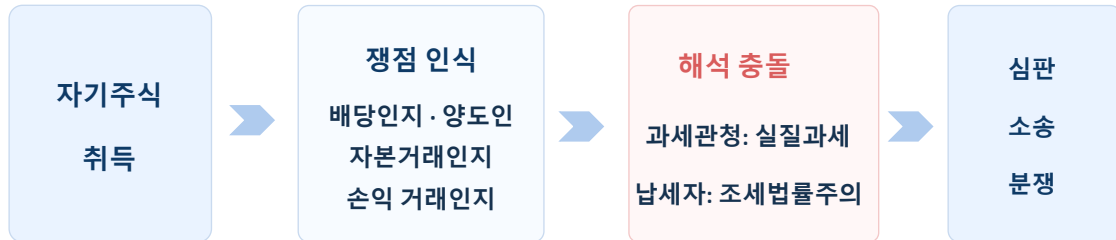
따라서, 소득구분이 달라져 과세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영실회

IV. 자기주식 관련 조세소송 사례 및 문제점

실질과세 적용의 한계와 조세 법률주의 충돌로 인한 분쟁

조세소송의 발생 구조



실질과세원칙은 과세요건을 확장·창설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법리

영실회

대표적 문제점 3가지

- ① 의제배당 성립요건·귀속시기 소각결정일 기준 규정은 명확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결과를 만든다.
장기간 보유 후 소각하는 경우, 의무소각 시 규제 목적과 달리 불확실성
- ② 불균등 소각의 입증 곤란 의무소각제도 하에서 일정 기간 내에 자기주식을 정리해야 하므로 거래 빈도 증가
“평가액 산정” “정당한 사유” “특수관계 여부” 등 사실인정이 복잡하다.
- ③ 배당·양도소득 경계 거래시점에 소득구분을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동일 거래의 소득구분 예측이 어려워 과세중립성이 저하된다.

조세법률주의의 예측 가능성을 약화 시키며, 자본거래의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든다.

영실회

자기주식 관련 조세소송 사례

구분	사건개요 및 쟁점	판결 요지 및 법리	과세 논리 변화
대법원 2023.4.27. 선고 2023두31263	과세당국은 해당 자기주식 취득을 ‘업무무관가지급금’ 또는 ‘무수익자산’ 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자기주식취득이 상법상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지급한 대가는 주식대가로 보아 업무무관 자금 대여가 아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주식가치 제고 기대, 회사의 재무상태, 운용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곧바로 무수익 자산으로 볼 수 없다.	과세당국 1. 매입 타당성 2. 경제적 합리성 3. 주식가치 개선 가능성 등 판단 필요
대법원 2022.6.16. 선고 2022두37257	대표자1인 주주로 회사에 주식을 양도 법인은 1년 경과 후 자기주식 소각 이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이나 자본환급 목적의 자본거래 인지 단순 주식양도 인지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매도가 자산 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여부는 계약서 뿐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 결정 방식, 거래의 경과 등 거래 전체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 단순 주식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	납세자 측면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 제고 과세당국 거래의 실질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입증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거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 상법, 세법의 해석이 불일치 하여 실무상 과세 적용에 혼란이 초래되는 문제 해소 필요성

영실회

V. 자기주식 관련 컨설팅 사례 연구

(기존 보유) 자기주식 소각 컨설팅 시뮬레이션

(기존 보유) 자기주식 소각 컨설팅 시뮬레이션

비교 항목	① 1회 일괄 소각	② 분산 소각	비고
의제배당 발생	특정 연도 집중	각 연도 분산	분산 유리
원천징수 부담	단기 대규모 재원 필요 유동성 위험↑	연도별 분산 조달 납세협력비용↓	분산 유리
주주 세 부담	누진세율 급등 세율 구간 상향	누진구조 충격 완화 세율 분산	분산 유리
귀속시기 분쟁	현금흐름 괴리 극대화 분쟁 가능성↑	연도별 관리·방어 가능	분산 유리
불균등 소각 증여의제	지분을 변화 집중 → 증여이익 급증	변화 완만 · 분쟁 강도 완충	분산 유리
평가 비용	1회 평가 (오류 시 분쟁 규모 대)	연도별 평가 – 비용 증가	선택
분산 소각 + 정당 평가 + 각종 서류의 정당한 문서화가 세제·정책 정합성 측면에서 최적 설계			

영실회

컨설팅 체크리스트와 시뮬레이션 포인트

구분	핵심 점검 사항	비고
의제배당 발생	소각결정일 기준 적용 여부 현금흐름표 작성	소각 일정 분산
불균등 소각 증여의제	30%, 3억 기준. 특수관계 여부	주식 평가 필수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와 현저한 차이. 조세부담검토	거래 조건 정상화
처분손익, 손익통산	기존보유 주식 6개월 유예기간 처분 목적, 회계처리, 세무조정 기준	예규 준수 설계
원천징수 재원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 RISK	재원계획, 주주소통

영실회

컨설팅 체크리스트와 시뮬레이션 포인트

구분	핵심 점검 사항	비고
주식가치 조정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가치 회석	신주인수권 없음
정관 개정	상법개정에 맞는 정관 규정 삽입	자기주식 예외적 보유 주총 의결
세법 보완	의무소각에 대한 의제배당 세법 보완 점검	향후 세법개정 체크
기존보유 자기주식	양도세 등 기 부담세액에 대한 처리	경정청구 / 비용처리

영실회

VI. 결어 및 제언 과 실무적 함의와 한계

결어

자기주식은 기업의 자본정책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
 지만, **현행 세법 체계에서는 취득·처분·소각 방식에 따라 주주 과세가 달라지고,
 의제배당 귀속시기 및 소득구분 문제로 인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 소각’ 이 현실화된 이상 **조세 법률주의에 맞는 명확성,
 실질 과세 원칙에 맞는 합리성, 그리고 과세형평에 맞는 체계가 함께 설계 되어
 야 한다.**

영실회

제언

01	<p>의제배당 귀속시기 합리화</p> <p>(입법) 대금 지급 시점 또는 소득확정 시점을 고려한 귀속 시기 특례 도입 필요성</p> <p>(행정) 원천징수 부담 완화를 위한 실무지침 정비</p>	02	<p>불균등 소각 증여의제 안전장치</p> <p>(입법) 일정 요건 충족 시 사전 심의 절차 마련 또는 합리적 면책 요건 마련 필요성</p> <p>(실무) 소각가액 산정·의사결정 과정 이사회이사록 등 의무화 (주식평가 보고서)</p>
03	<p>소득구분 체계 정비 (과세중립성)</p> <p>(정책) “동일 경제행위 = 동일 과세” 원칙 회복</p> <p>(개선) 의제배당 ↔ 양도소득 경계 기준 명확화 및 중복 과세 방지</p>	04	<p>의무소각 도입 시 경과규정 정비</p> <p>(입법) 기존 보유 자기주식 소각 시 과세, 원천징수 혼란 방지</p> <p>(실무) 주주별 세부담 시뮬레이션 제도화 + 분할 납부 특례</p>

영실회

실무적 함의

본 연구는 상법상 자기주식의 의무소각화 논의 및 개정과 관련하여 의제배당 귀속 시기의 합리화, 불균등 소각의 안전장치 마련, 소득구분 체계정비, 경과 규정과 원천징수의 정비 등 세무실무의 안정성과 조세체계의 정합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실회

한계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개정의 근본 취지는, 그동안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거래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상법·세법의 해석이 불일치 하여 실무상 과세 적용의 상당한 혼란을 해소하는데 있다.

그러나, 개정된 상법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세법의 개정을 통해 과세요건의 명확화, 조세 회피 방지, 과세형평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영실회

연구자 명단

신청 팀	연구팀명	영실(靈室)회		
		성명	등록번호	연락처
신청 팀	연구자 명단	김명택	15837	010-9004-7420
		김미화	15754	010-7267-7799
		김상익	35373	010-3363-6634
		문도영	14618	010-8587-4346
		박정미	2400014	010-6339-6259
		박현규	18585	010-4310-9330
		유동길	30749	010-3752-0587
		윤정명	34491	010-4753-5153
		이명진	9100507	010-2221-3181
		정혜성	32631	010-5025-7520

감사합니다.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발표

세무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기관 참여 방안에 대한 연구

동고양세법탐구자들

동고양 세법탐구자들

동고양세법탐구자들은 인천·동고양 지역 세무사 5명이 함께한 연구팀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ESG 공시 시장에서 세무사의 새로운 역할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이번 세법연구왕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국내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3자 인증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세무사회 주도의 검증기관 참여 방안과 시장 장악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언합니다.

대표 세무사



공창기 세무사

동고양세법탐구자들 대표

동고양세법탐구자들 팀을 이끌며 세법탐구의 열정을 팀 전체에 불어넣고 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세법 연구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팀원 소개



공창기 세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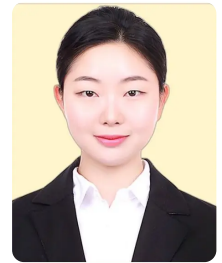
김윤경 세무사



이정수 세무사



이정희 세무사



전유연 세무사

세무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기관 참여 방안에 대한 연구

동고양세법탐구자들

공창기, 이정희, 전유연, 김윤경, 이정수



목차

- 01 연구의 배경 및 기대효과
- 02 ESG 경영의 의의
- 03 ESG 경영의 실효성
- 04 국내외 ESG 공시 현황
- 05 국내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제3자 인증 현황
- 06 세무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인증기관 참여 방안
- 07 결론

01 연구의 배경 및 기대효과



ESG 공시의 확대

전세계적으로 ESG 공시의 의무화와 중요성이 확대됨

제3자 검증의 중요성

ESG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3자 검증의 중요성이 대두됨

기대효과

검증기관으로 세무사가 참여함에 따라 검증시장의 다양성 확보와 중소 및 중견기업의 ESG 대응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02 ESG 경영의 의미



ESG의 개념

-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지칭하는 것으로 약어로 ESG경영 또는 ESG활동이라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된다.
- ESG활동은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초래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 환경, 사회, 경제 요소가 서로 연관되어 있기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리스크가 생기면 지속가능한 상태가 어렵다.

참고 - 박재현, 김나라, "국내 ESG 연구동향 탐색, 연세대학교, 2022"

02 ESG 경영의 의미



증대되는 ESG 경영 중요성

- 전통적으로 재무적 성과에만 초점을 맞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가 더 나은 성과를 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ESG 경영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 ESG 논의는 2004~2005년 유엔환경프로그램 금융계획(UNEP FI) 발표를 계기로 본격화되었고, 2006년 유엔책임투자원칙(PRI) 서명 기관은 63개에서 2019년 상반기 2,372개로 급증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이후 블랙록이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고,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선언하면서 ESG는 전 세계 기업 경영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참고 - 김영주,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의 '경고' '탄소배출 억제 노력 안하면 투자 회수'", 데일리임팩트, 2021

03 ESG 경영의 실효성



ESG와 재무성과 관계

- ESG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지난 10여 년간 관련 학문적 연구도 크게 증가하였다. 주요 연구 주제는 ESG와 기업의 재무성과 간 관계로, 약 2,000편의 연구 중 90%에서 두 변수 간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 연구에 따르면 ESG 경영이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가치 향상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기여한다.

참고 - 반혜정, 박호진, "ESG경영이 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리회계학회, 2022

04 국내외 ESG 공시 현황 - 해외

프랑스

- 총자산 또는 순매출액 1억 유로 초과시 ESG 공시 의무대상

스페인

- 총자산 2천만 유로 이상이며 매출액 4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 ESG 공시 의무대상

이탈리아

- 총자산 2천만 유로 이상이며 매출액 4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 ESG 공시 의무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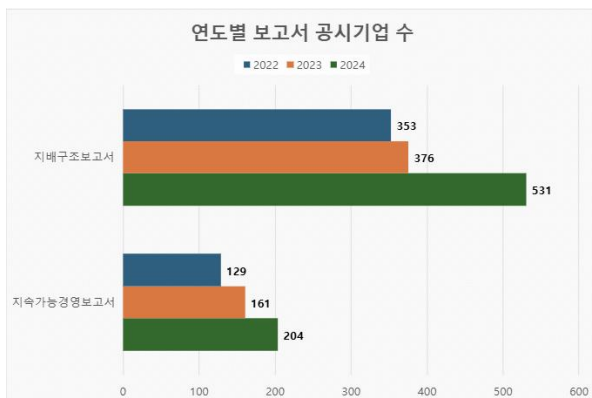
미국

- 2025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 정보 보고 의무화 확정



참고 - 해외 ESG 정보 인증제도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24

04 국내외 ESG 공시 현황 - 국내



참고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기업 늘고, 발간시점당겨져...공시 모범사례는? impact on 이재영



현재 상황

- ESG 정보 공시에 대한 의무규정 및 제3자 인증에 관한 규정 없음
- 자발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하는 기업이 매해 늘어나는 추세

04 국내외 ESG 공시 현황 - 국내

2022년 기준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현황



코스피 상장사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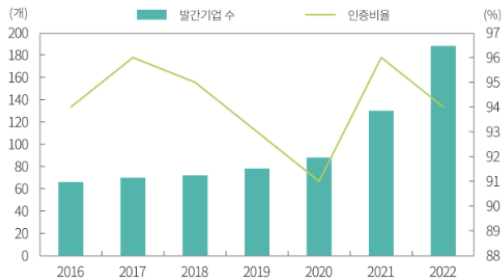
코스닥 상장사

1.43%

- 2022년 기준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중 코스피 상장사가 약 90%, 코스닥 상장사는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이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 중 25%, 전체 코스닥 상장사 중 1.43%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다.

05 국내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3자 인증 현황

<그림 3>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현황



자료: KICPA(2023. 5)

참고 - 홍지연, 해외ESG 정보 인증 제도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24

ESG 제3자 인증이란?

ESG 제3자 검증이란 기업이 공개하는 ESG 관련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제3자의 인증 및 검증을 의미한다.

국내 ESG 제3자 인증 비율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공시기준 및 인증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ESG 제3자 인증 기업 비율은 평균 90%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이는 해외 기업의 자발적 제3자 인증 비율이 67%인 점을 감안하면 유의미하게 높은 차이이다.

06 세무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인증 기관 참여 방안

ESG 인증 전문 교육

- ESG경영 인증기준 이해도 향상
- ESG 인증 업무를 희망하는 세무사 모집하여 교육하는 방안 고려 가능
- 경우에 따라 ESG 인증 시험을 통과할 시 업무참여자격 부여하는 방안 유효

ESG 인증 시장 검토

- ESG 공시 및 제3자 인증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코스피, 코스닥 상장 외 중소·중견기업으로의 확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 상장법인의 인증을 위해서는 검증기관의 규모 및 투입가능 인원 확보가 필수

한국세무사회 주도 ESG 인증

- 방안 1) 한국세무사회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 후 일정 자격의 세무사 모집하여 검증업무 진행
- 방안 2) 한국세무사회가 컨설팅업체와의 MOU체결 등을 통한 협업 진행

07 인증기관 도입 성공을 위한 전략

(1) 기업진단 시장 진입 실패 사례 분석

진입 타이밍

- 제도 도입 초기 주도권 확보 실패로 인해 회계사·기술사 등 타 자격사 대비 후발주자로 전략

서비스의 표준화 및 저가 경쟁

- 단순 자본금 확인 위주의 표준화된 업무에 그쳐 차별화된 인사이트 제공 실패 및 수수료 덤핑 발생

산업 전문성 결여

- 건설·제조 등 각 산업 특성에 맞는 진단이 아닌, 재무제표 위주의 형식적 진단으로 고객 신뢰 상실

사후관리 부재

- 진단 보고서 제출 후 경영 개선이나 세무적 혜택으로 이어지는 '솔루션' 제시 부족

07 인증기관 도입 성공을 위한 전략

(2) 한국세무사회 주도 시장 장악 전략

입법 및 제도화

- SME 맞춤형 공식 가이드라인 제정
- 법적 검증 권한 확보
- 세제혜택 연계

인프라 및 플랫폼

- 세무사회 공인 ESG 검증 플랫폼 개발
- Digital Lock-in 전략

네트워크 및 공동 마케팅

- 'ESG 전문 세무사' 인증 제도 도입
- B2B 파트너십 체결

고부가가치모델로의 전환

- Tax-ESG 통합 솔루션 제공
- 국제 세무 및 디지털 자산 연계

08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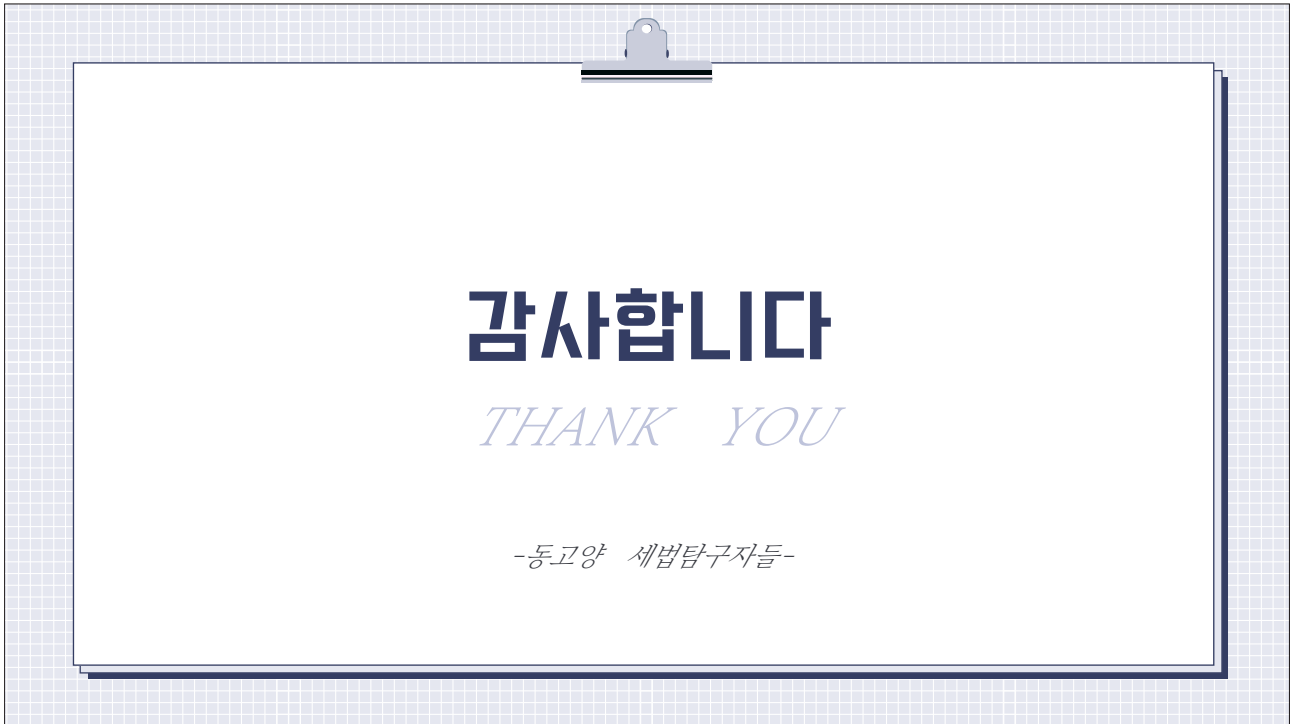
ESG 인증 세무사의 새로운 영역

국제적으로 ESG 공시와 제3자 검증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ESG 경영이 제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수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세무사는 전문성과 지배구조 이해를 바탕으로 ESG 검증에 경쟁력이 있으나, 개별 사무소 단위 참여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참여 체계 구축과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점차 권리로 인식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세무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된다. ESG 검증 시장은 '기업진단' 및 '4대 보험' 업무에서 나타난 관행을 반복하기보다, 적절한 보상이 수반되는 독립된 유료 직무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발표

종합부동산세 제도 변경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글로벌글로벌비

글로벌 글로비

글로벌 글로비는 서울 지역 세무사 3명이 모인 연구팀으로, 종합부동산세 제도 변경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실증적 영향을 조세의 자본화 이론과 정책 신뢰성을 이론적 틀로 삼아, 전국 및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차등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규명하였으며 세법연구왕 대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세법적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대표 세무사



최희선 세무사

글로벌 글로비 대표

글로벌 글로비 팀을 이끌며 세법과 실무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팀원들과 함께 세법 연구의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팀원 소개



최희선 세무사



김상철 세무사



문초록 세무사



종합부동산세 제도 변경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조세의 자본화 가설과 정책 신뢰성에 따른
지역별 차등 영향 분석 -

2026. 4. 21.

팀글로벌글로비 최희선

CONTENTS

1. 서론

- 연구 배경
- 연구 목적

4. 실증 분석 결과

- 분석 결과 : 전국 단위
- 분석 결과 : 다주택자 완화 정책
- 분석 결과 :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

2. 이론적 배경 및 정책 분석

- 조세의 자본화 이론
- 주요 종부세 개정 구간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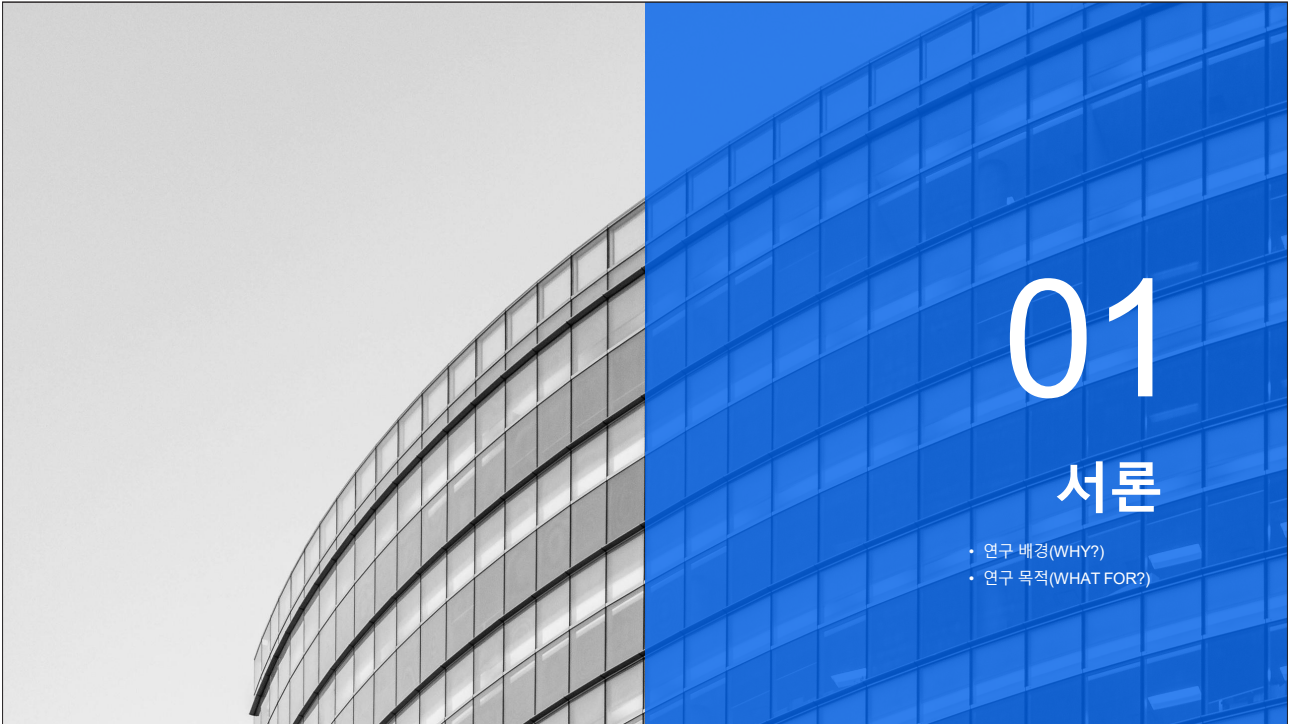
5. 결론 및 세법적 제언

- 종합 결론
- 정책 제언

3. 실증 분석 설계

- 분석 데이터 및 방법론
- 분석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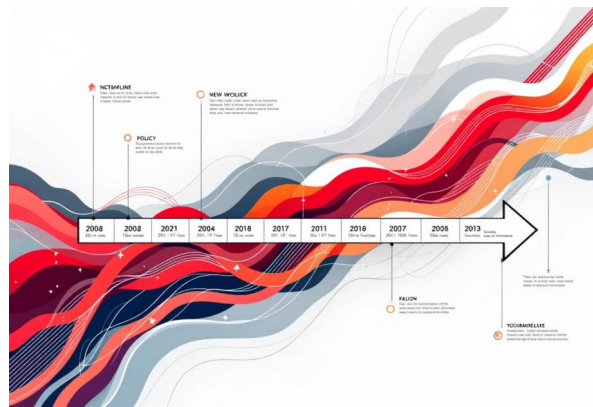
6. Q & A



연구 배경(WHY?)

2005년 도입 이후 규제와 완화의 반복이 시장 안정화 목적을 달성했는가?

- 종합부동산세는 도입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를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도구로 활용
- 최근 5년간(2018~2022) 급격한 정책 기조 변화
 - ✓ 2018년 ~ 2020년 징벌적 과세 강화
 - ✓ 2022년 이후 정상화 조치
- 이러한 변동이 실제 시장 가격에 미친 영향 및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 필요



시각 자료: 연도별 중부세 주요 개정 히스토리 타임라인.

연구 목적

01 검증

세법 개정이 주택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조세 자본화' 효과를 계량적 검증

02 비교

다주택자 종과세 강화기와
최근의 완화기를 대조하여
시장 반응의 대칭성 확인

03 심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정책 반응도 차이 분석 및 실효성 평가



조세의 자본화(Tax Capitalization) 이론

- **조세 자본화(Tax Capitalization)**

: 특정 자산에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거나 기존 세금이 인상될때,
그 미래의 세금 부담이 현재 자산 가치에 미리 반영되어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

- **조세의 자본화 메커니즘**

: 보유세 인상 → 자산 유지 비용 증가 → 미래 기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하락 → 자산 가격 하락

- **핵심 변수**

: 시장의 가격 상승 기대감이 조세 비용보다 클 경우 자본화 효과는 상쇄됨.
즉, 세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익이 높으면 가격은 상승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핵심 가설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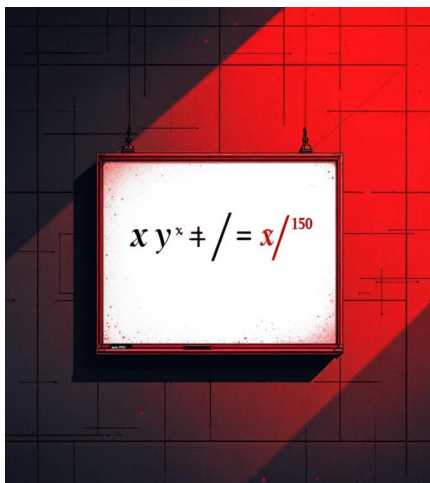
주요 증부세 개정 구간 정리

2018년 이후 주요 증부세 개정 구간: 규제 강화와 완화의 극명한 대조

구분	주요 개정 내용	핵심 조치 및 영향
강화기 (2018~2020)	2018.9.13 / 2019.12.16 / 202.7.10 대책	3주택자 이상 최고 세율 6.0%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 (최대 95%)
완화기 (2022~2023)	2022.7.21 / 2023.01 대책	기본공제액 상향 (9억 → 12억) 다주택자 증과세율 폐지 및 하향 조정



분석 데이터 및 방법론



분석표본(Sample)

전국 및 지역별 주택매매가격지수
(2018년 1월 부터 2025년 최근까지)

분석방법(Methodology)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통제변수(Control Variables)

거시경제지표(금리-CD수익률, 통화량-M2)
가구 수 변동량 등

분석 가설

H1 종부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증가의 가격 억제 효과

종부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증가는 주택 보유 비용을 높여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2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 조치의 가격 상승 유도 효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조치는 자산 유지 비용을 낮추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H3 지역별 부동산 시장 탄력성에 따른 정책 반응도 차이

부동산 시장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04

실증 분석 결과

- 분석 결과 1: 전국 단위(전체 흐름)
- 분석 결과 2: 다주택자 완화 정책(반전 결과)
- 분석 결과 3: 수도권 vs 비수도권

분석 결과 1: 전국 단위

<표 1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칭일 후 2개월의 주택가격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HPP_t = \beta_0 + \beta_1 RTR_t + \beta_2 RCTR_t + \beta_3 RDRTR_t + \beta_4 GDP_t + \beta_5 CPI_t + \beta_6 CD_t + \beta_7 KOSPI_t + \beta_8 IP_t + \beta_9 MD_t + \varepsilon_t$$

변수	회귀계수	T-값
INTERCEPT	-244.810	-6.36***
RTR	-2.731	-1.81*
RCTR	0.189	0.11
RDRTR	0.210	0.13
GDP	-0.832	-4.08***
CPI	-78.204	-2.41**
CD	4.547	3.58***
KOSPI	12.360	5.47***
IP	23.274	1.65*
MD	33.805	4.68***
F-값	113.30***	
수정 R ²	0.3584	
표준수	2.241	

주1) 변수 정의는 <표 11> 하단의 내용 참조.
주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

<표 1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칭일 후 3개월의 주택가격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HPP_t = \beta_0 + \beta_1 RTR_t + \beta_2 RCTR_t + \beta_3 RDRTR_t + \beta_4 GDP_t + \beta_5 CPI_t + \beta_6 CD_t + \beta_7 KOSPI_t + \beta_8 IP_t + \beta_9 MD_t + \varepsilon_t$$

변수	회귀계수	T-값
INTERCEPT	-240.593	-6.15***
RTR	-2.917	-2.32**
RCTR	-0.623	-0.38
RDRTR	-0.351	-0.27
GDP	-0.832	-4.08***
CPI	-82.740	-2.51**
CD	4.702	3.58***
KOSPI	12.094	5.29***
IP	22.757	1.61
MD	34.907	4.73***
F-값	113.50***	
수정 R ²	0.356	
표준수	2.241	

주1) 변수 정의는 <표 11> 하단의 내용 참조.
주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

✓ 실증 분석 결과

중부세 강화는 가격 안정에 정(+)의 영향을 주었으나, 2020년까지의 급등기에는 금리 및 유동성 요인이 조세효과를 압도함

✓ 주요 시사점

자본화 효과가 존재하나, 거시경제 환경과 시장 심리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됨.

분석 결과 2: 다주택자 완화 정책(반전 결과)

<표 1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칭일 후 2개월의 아파트가격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APP_t = \beta_0 + \beta_1 RTR_t + \beta_2 RCTR_t + \beta_3 RDRTR_t + \beta_4 GDP_t + \beta_5 CPI_t + \beta_6 CD_t + \beta_7 KOSPI_t + \beta_8 IP_t + \beta_9 MD_t + \varepsilon_t$$

변수	회귀계수	T-값
INTERCEPT	-251.046	-5.72***
RTR	-4.209	-2.37**
RCTR	0.590	0.31
RDRTR	0.213	0.13
GDP	-0.566	-2.35**
CPI	-123.344	-3.35***
CD	7.439	5.18***
KOSPI	17.178	6.53***
IP	27.502	1.69*
MD	43.602	5.29***
F-값	126.41***	
수정 R ²	0.3351	
표준수	2.241	

주1) 변수 정의는 <표 14> 하단의 내용 참조.
주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

<표 1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칭일 후 3개월의 아파트가격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APP_t = \beta_0 + \beta_1 RTR_t + \beta_2 RCTR_t + \beta_3 RDRTR_t + \beta_4 GDP_t + \beta_5 CPI_t + \beta_6 CD_t + \beta_7 KOSPI_t + \beta_8 IP_t + \beta_9 MD_t + \varepsilon_t$$

변수	회귀계수	T-값
INTERCEPT	-247.177	-5.62***
RTR	-4.461	-3.03***
RCTR	-0.404	-0.26
RDRTR	-0.544	-0.35
GDP	-0.565	-2.35**
CPI	-127.753	-3.47***
CD	7.609	5.27***
KOSPI	16.938	6.54***
IP	24.975	1.51
MD	45.619	5.54***
F-값	127.02***	
수정 R ²	0.3361	
표준수	2.241	

주1) 변수 정의는 <표 14> 하단의 내용 참조.
주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

✓ 데이터

2022년 이후 완화 정책 더미 변수의 p-value가 유의수준(0.05)을 초과함

✓ 핵심

다주택자 증과완화가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하지 않음 (통계적 유의성 없음)

✓ 해석

정책의 빈번한 변경에 따른 '학습 효과'와 정책 불신인 납세자의 태도 변화를 지연시킴

분석 결과 3: 수도권 vs 비 수도권

<표 18> 주택분 총량부동산세 개정일 후 2개월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MOPPINBPP_{it} = \beta_0 + \beta_1RTR_{it} + \beta_2RCTR_{it} + \beta_3RDTR_{it} + \beta_4GDP_{it} + \beta_5CPI_{it} + \beta_6CD_{it} + \beta_7KOSPI_{it} + \beta_8IP_{it} + \beta_9AC_{it} + \epsilon_{it}$$

변수	분석대상 : 수도권		분석대상 : 비수도권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INTERCEPT	-410.422	-10.25 ***	-215.539	-7.22 ***
RTR	-4.428	-2.81 ***	-2.601	-2.03 **
RCTR	2.905	1.57	0.188	0.12
RDTR	-1.480	-0.9	0.495	0.37
GDP	-1.157	-4.6 ***	5.831	24.3 ***
CPI	-216.824	-6.42 ***	-49.947	-1.82 *
CD	11.870	8.97 ***	3.173	2.91 ***
KOSPI	23.668	10.07 ***	10.132	5.28 ***
IP	-9.272	-0.63	25.362	2.12 **
AC	91.396	12.2 ***	18.926	3.26 ***
F-값	325.9 ***		162.1 ***	
수정 R ²	0.9005		0.8904	
표준수	396		1,845	

주요 변수 정의는 <표 17> 페이지를 참조하고, 표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

<표 19> 주택분 총량부동산세 개정일 후 3개월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MOPPINBPP_{it} = \beta_0 + \beta_1RTR_{it} + \beta_2RCTR_{it} + \beta_3RDTR_{it} + \beta_4GDP_{it} + \beta_5CPI_{it} + \beta_6CD_{it} + \beta_7KOSPI_{it} + \beta_8IP_{it} + \beta_9AC_{it} + \epsilon_{it}$$

변수	분석대상 : 수도권		분석대상 : 비수도권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INTERCEPT	-396.168	-9.79 ***	-233.497	-7.03 ***
RTR	-4.815	-3.7 ***	-2.748	-2.58 ***
RCTR	0.577	0.34	-0.462	-0.47
RDTR	-2.244	-1.64	-0.908	-0.91
GDP	-1.154	-4.62 ***	5.832	24.32 ***
CPI	-201.471	-6.78 ***	-53.111	-1.9 *
CD	12.598	9.29 ***	3.248	2.92 ***
KOSPI	23.856	10.1 ***	9.792	5.08 ***
IP	-11.197	-0.77	25.201	2.1 ***
AC	95.458	12.51 ***	20.930	3.35 ***
F-값	331.15 ***		162.77 ***	
수정 R ²	0.9019		0.8911	
표준수	396		1,845	

주요 변수 정의는 <표 17> 페이지를 참조하고, 표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

Metropolitan Area

수도권 분석 결과

- 높은 t-value를 기록하며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 도출
- 세제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뚜렷한 조세 자본화 효과

Non-Metropolitan Area

비수도권 분석 결과

- 세금 변수보다 지역 내 미분양 지수 및 입주 물량이 더 큰 영향을 받는 지역
- 수급 불균형 요인이 조세 정책효과 상쇄, 정책 실효성 저하



05

결론 및 세법적 제언

- 종합 결론
- 정책 제언(세법연구와 핵심)

종합 결론

종부세는 이론적으로 가격을 조절하는 유효한 수단이나,
현실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효과를 결정하는 선행 조건임.

이론적 유효성 확인

실증 분석 결과, 종부세는 조세 자본화 기제를 통해 주택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잠재적 유효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

정책 신뢰의 중요성

다주택자 완화 정책이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내지 못한 것은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한 시장의 불신이 누적된 영향

복합적 환경 고려

고금리 기조와 같은 거시경제 환경이 정책 효과를 상쇄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정책 설계 시 고려 필요

정책 제언 (세법연구왕 핵심)

Consistency & Predictability

정책 일관성 확보 및 중장기 로드맵 구축

징벌적 과세와 파격적 완화의 반복 지양,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한 중장기 보유세 로드맵을 구축

Regional Differentiation

지역별 탄력적 세율 체계(Regional Tax Differential) 도입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방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시장 탄력성을 고려한 차등 세율 체계 도입, 정책의 실효성 제고

Normalization

조세 제도의 정상화

조세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담세력을 고려한 합리적 세제 설계를 통하여 조세 정책의 신뢰 회복 필요

가천대학교·일본대학원·회계·세무학과 최희선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발표

장기 기증 등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세금 그이상까지

세금 그 이상까지

세금 그 이상까지는 광주·익산 지역 세무사 3명이 함께한 연구팀으로, 만성적인 장기 부족과 이식 대기 중 사망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세법의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이번 세법연구왕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혈액·장기·시신 등 인체 기증 유형별 현황과 국가별 세제 지원 제도를 분석하여, 기증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대표 세무사



김기영 세무사

세금 그 이상까지 대표

세금 그 이상까지 팀을 이끌며 사회적 문제를 세법의 시각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세법의 본질적 가치를 탐구하고 실현하고자 합니다.

팀원 소개



김기영 세무사



박봉근 세무사



태영환 세무사



연구 방법

- 인체 기증에 관한 법률과 기증 유형 검토
- 우리나라 현황
- 장기 부족에 따른 문제 인식
- 국가별 도입 제도 연구
- 장기 기증에 대한 세제 혜택의 찬반 의견 고찰
- 세제 지원 방안 제안 도출

세금그 이상까지

인체 기증 관련 법률

- 혈액관리법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세금그 이상까지

기증 구분

구분	인체조직	장기	조혈모세포	헌혈	시신
종류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와 건 신경, 혈관 심장판막, 심장막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 안구, 손과 팔 발과 다리			
기증 시기	살아있는 동안, 뇌사 상태 또는 사망 후 15시간 이내	살아있는 동안 혹은 뇌사 상태 시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사후
이식 시기	가공 및 보관 과정을 거쳐 이식	즉시 이식 시행	환자발생	환자발생	
특징	최대 백여 명이 수혜 가능	최대 9명이 수혜 가능	유전자 일치해야 가능	성분별 유통 기간 차이	

세금그 이상까지

우리나라 현황

❖ 기증 실태

- 기증자 부족
- 대기환자 증가

❖ 활성화 노력

- 생명 나눔 문화와 교육 확산
- 관련 의료기관 지원 확대
-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강화

세금그 이상까지

인체조직 생산 · 수입 현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연보」

연도	2022	2023	2024
수입율(%)	92.9	91.5	91.3

세금그 이상까지

이식대기자와 대기 중 사망자

(단위: 명)

구분	뇌사 장기기증	이식 대기자	이식대기 중 사망자	일평균 대기 중 사망자
2023	483	43,421	2,906	7.9
2022	405	41,706	2,919	8.0
2021	442	39,261	2,482	6.8
2020	478	35,852	2,193	6.0
2019	450	32,990	2,144	5.9
2018	449	30,544	1,894	5.2
2017	515	27,701	1,761	4.8

[출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2023 연간보고서]

세금그 이상까지

인구 백만 명 당 뇌사 장기기증률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	9.95	8.66	8.68	9.22	8.56	7.88	9.32
스페인	46.90	48.00	49.61	37.40	40.80	46.03	49.38
미국	31.96	33.32	36.88	38.03	41.60	44.50	48.04
포르투갈	34.01	33.63	33.80	24.61	29.60	30.80	37.13
벨기에	33.62	33.40	30.30	21.20	26.90	29.40	35.81
이탈리아	28.20	24.62	24.70	21.60	24.10	25.50	29.39
독일	9.70	11.50	11.20	11.00	11.10	10.34	11.58
호주	20.70	22.17	21.60	18.00	16.30	17.48	19.43

[출처: 국제 장기이식 등록 시스템(IRODaT)]

세금그 이상까지

장기이식 관광

- ❖ 이식을 목적으로 국경을 넘어 인신(人身)이 이동하는 행위
- ❖ 비거주자인 환자에게 이식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원이 해당 국가의 주민을 위한 이식 서비스제공 능력을 약화시키는 경우

세금그 이상까지

영화 속의 장기이식 관광



꼭 동남아 애들 대신
한국 애들을 찾아요



영화 **다만약에서 구하소서** 에서

세금그 이상까지

해외 장기 이식 관광의 실태

📄 전 세계 논문을 통한 장기 구매 6,000명 조사

- 장기 공여자가 가장 많은 국가 : 중국
(전체 공여자 중 63.6%)
- 장기구매 환자가 가장 많은 국가 : 대만
- 우리나라의 장기구매 국가 순위 : **2위**
(1,122명 18.7%)

[출처: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병원과 중앙경찰청 공동연구]

세금그 이상까지

국가별 장기 기증 동의 방식

Opt-in	Out-out	Opt-in Reciprocal
사전 동의 자발적 동의	추정 동의 자동 등록	상호주의적 Opt-in 두 제도의 결합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전 기증의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 기증자로 등록 • 원치않는 경우 생전에 별도의 거부의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동의 방식을 기본 운용 • 기증 등록 안하면 받을 자격을 제한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싱가포르

세금그 이상까지

미국의 세제 지원 제도

주(州)	대상	공제 방식	공제 대상
위스콘신	살아있는 개인	소득공제	교통비, 숙박비 소득 손실
오하이오	살아있는 개인	소득공제	교통비, 숙박비 소득 손실
아이오와	살아있는 개인	소득공제	교통비, 숙박비 소득 손실
유타	살아있는 개인	소득공제	교통비, 숙박비 임금 손실, 기타 비용

주) 공제한도: 10,000달러

세금그 이상까지

장기 기증 등에 세제 혜택의 찬반 의견

반대의견	찬성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적 근거 부족 • 저소득층에 대한 착취 구조 • 윤리적 문제 • 국가 재정에 부담 • 신체 상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증율 증가에 의존하는 평가할 것 아님 • 간접적인 지원으로 기증 강제성 없음 • 세부담이 없는 저소득층은 유인효과 없음 • 이식·관리하는 기관들은 지원을 받는 데 반해 기증자는 보상없음 • 세제 혜택은 공익 행위의 간접적인 유인책 • 기증활성화는 국가의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세금그 이상까지

기부유형에 따른 세제 혜택의 차이

유형	기부금	손금(경비)	평가 방법
현금	해당		금액으로 평가
현물	대부분 해당		시가 또는 장부가액
		법정 무상 기증 식품	장부가액
권리포기	헌혈기부권		기념품의 가격
용역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일 50,000원
		적정 무료 진료권	진료가액
인체 기증	없음	없음	없음

세금그 이상까지

세제 지원 제도 도입 방식

구분	도입 방식
혈액·제대혈	일정액 세액 공제
생전(生前) 장기 등 기증	제3자 제공 시 세액공제 치료비·교통비 등 실비에 대하여 추가 소득공제
사망·뇌사 시 장기 등 기증	사망 해당 연도 세액공제, 소득공제 상속세 세액공제 또는 과세가액에서 차감
시신 기증	장례비 공제 한도 증액 시신 기증 세액 공제 신설
사업주	유급 휴가를 제공한 경우 일정금액 공제

세금그 이상까지

고맙다

세금그 이상까지

감사합니다

세금그 이상까지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발표

증여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더피너클(The Pinnacle)



한국세무사회

더 피너클 (The Pinnacle)

더피너클(The Pinnacle)은 세무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연구팀으로, 세법 연구의 최정상(Pinnacle)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연구왕 대회를 통해 탁월한 연구 역량과 실무 전문성을 결집하여 최고 수준의 세법 연구 성과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대표 세무사



정연대 세무사

더피너클 대표

더피너클 팀을 이끌며 세법 연구의 최고점을 향한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세법의 정수를 탐구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팀원 소개



정연대 세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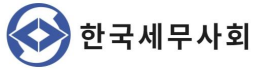
신정민 세무사



한은경 세무사



신승엽 세무사



증여의 범위와 한계선에 관한 연구

- 증여와 소득이 중첩되는 영역 및 자기증여 조정을 중심으로 -

증여의 범위와 한계선에 관한 연구

연구팀 소개

더피너클(The Pinnacle)

팀장 세무사 정연대

팀원 세무사 신승엽

팀원 세무사 신정민

팀원 세무사 한은경

Index

1. 연구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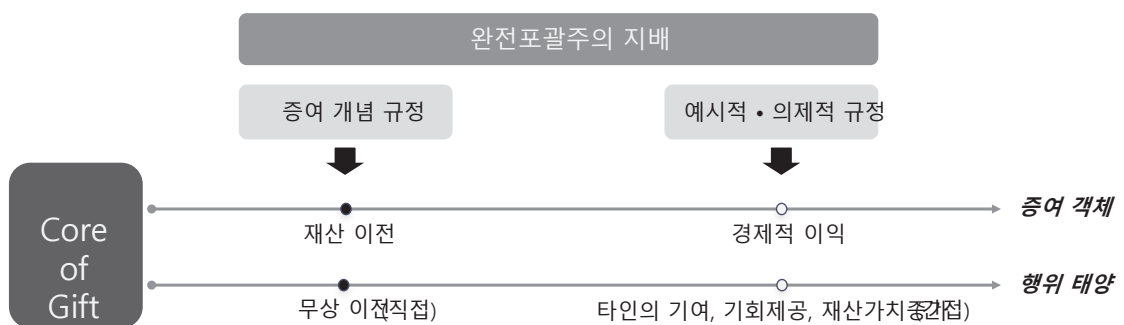
2. 연구의 내용

- (1) 포괄 증여 개념 및 범위 체계 분석
- (2) 증여과세와 소득과세의 중첩과 조정
 - 증여과세와 소득과세 적용의 일반 원칙
 - 증여와 소득의 과세 경합 조정의 개별규정
- (3) 법인주주의 간접이익에 대한 과세와 이중과세조정 현황
- (4) 자기증여 조정 현황

3. 연구의 성과

- 논의대상에 대한 입법적 개선(안) 도출

1. 연구의 배경



- ❖ (포괄증여 개념의 한계) 완전포괄주의는 "완전히" 포괄적일 수 있는가 → 증여 개념 범위 체계 분석을 통한 평가
- ❖ (증여와 소득의 중첩) 무상이익에 대한 소득과세와 증여과세의 이원적 중첩 중첩 영역에 대한 경계조정의 평가
- ❖ (법인주주의 간접이익) 법인 잉여금(미실현소득)에 대한 선 증여과세, 후 소득과세 → 이중과세 현상 조정 평가
- ❖ (자기증여) 의제 증여 과정에서 "self-gift" 현상 발생 → 관념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문제에 대한 평가

2-1. 포괄증여 개념 범위 체계 분석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
 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
 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
 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
 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 ❖ 불확정 개념의 사슬 구조로 구성
- ❖ 선례의 축적을 통한 사례의 유형화 작업으로 그 개념과 범위를 정립

개념 표지	내용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자 관점에서 증여 개념을 규정함 • 증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되, 연대납세의무 배제 시 증여자 특정 없이 과세 가능
수단과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 또는 거래를 증여의 수단으로 삼음 • 간접적인 방법의 이전은 증여의 외연을 확장하는 주요 수단
본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성
객체와 상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체 :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 재산가치증가 • 상대방 : 타인 → 자기증여 과세의 불합리성 근거

2-1. 포괄증여 개념 범위 체계 분석

증여 범위의 유형화

- ❖ 포괄증여 개념에 따른 증여의 영역 확장 : 변칙적 증여 행위 방지

증여 개념만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한가?
 (가액 계산의 문제)

- ❖ 2015년 이전 : 대법원은 과세체계의 불완전성 지적하며 과세 불가 입장
- ❖ 2015년 법개정으로 증여 범위 체계 구조 보완
 - 증여(재산)의 유형화
 - 증여(재산) 유형별 가액계산 규정 마련

유형	내용
직접 증여	•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포괄 증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은 경우 •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포괄 증여	•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예시 증여	• 제33조 등 예시적 증여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추정 증여	•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포괄 증여	•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6호)
의제 증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감몰아주기 또는 일감 떼어주기의 경우 • 특정법인을 통해 이익을 부여한 경우 •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2-2. 증여과세와 소득과세의 중첩과 조정

증여의 범위와 한계선에 관한 연구

❖ 증여와 소득의 개념 구분

소득 개념 규정

- 소득 개념은 선형적 개념이 아니라 목적론적 개념 또는 어떤 목표를 담고 있는 조작적 개념으로 이해^(*)

(*1) 이창희(1999)

증여와 소득의 구별 기준

- 총론적 기준: 무상성 vs 대가성
-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증여의 판단기준^(*)
 - ☑ 자발적 의사 및 반대급부의 존재
 - ☑ 상대방과의 관계
 - ☑ 상황과 맥락
 - ☑ 무상가액의 규모
 - ☑ 법적 도덕적 의무

(*2) Commissioner v. Duberstein 363 U.S. 278 (1960)

2-2. 증여과세와 소득과세의 중첩과 조정

증여의 범위와 한계선에 관한 연구

❖ 증여과세와 소득과세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원칙

소득우선과세원칙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증여와 소득이 중첩되는 영역에서 일반 원칙으로 작용

법인과세 - 주주과세 허용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는 영리법인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그 주주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가능

- 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중복적 허용

▶ 위 일반원리에 의해 증여와 소득의 중첩 영역에 대한 과세 조정

2-2. 증여과세와 소득과세의 중첩과 조정

❖ 증여와 소득의 과세 경합을 조정하는 개별 규정

이익 구분	내용	과세구분
고가양도이익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고가양도한 경우(일반원칙)	소득 先과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고가양도한 경우(개별특칙)	증여 先과세
	• 비열거소득 과세대상자산을 고가양도한 경우(일반원칙)	증여 先과세
타익신탁이익	• 위탁자과세신탁의 경우 : 위탁자가 소득세, 수익자가 증여세 납부	증여, 소득 각각 과세
	• 수익자과세신탁의 경우 : 수익자에게 소득세, 증여세 모두 과세	
초과배당이익	• 초과배당받는 주주에게 소득세, 증여세 모두 과세(개별특칙)	
부당행위소득	• 손익거래에서 부여된 인정상여 등의 소득(일반원칙)	소득 先과세
	• 자본거래에서 부여된 이익(기타사외유출 처분)(개별특칙)*1	증여 先과세

*1 손익거래와 자본거래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현물출자 거래이익은 제외

2-2. 증여과세와 소득과세의 중첩과 조정

❖ 고가양도이익(소득 vs 증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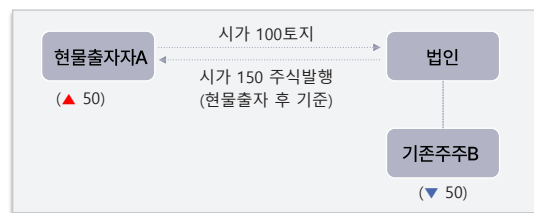
- 시가 100, 양도 200 : 시가초과이익 100
- ✓ 양도소득이라면? 증여세 과세, 소득세 과세 안함
- ✓ 그 외의 소득이라면? 소득세 과세함

❖ 타익신탁이익(위탁자, 수익자 불일치 신탁)(소득 & 증여)



- 위탁자A가 소득세를 납부하면? 세후소득에 대해 B가 증여세 납부
- 수익자B가 소득세를 납부하면? 세후소득에 대해 B가 증여세 납부
- ✓ 초과배당을 통한 증여도 같은 구조
- ✓ 이중과세가 아님

❖ 자본거래 분여이익 : 고가현물출자 사례



- A가 얻은 이익 "50"의 성격(소득 vs 증여)
 - ✓ A의 이익은 법인으로 부터 부여받은 소득인가?
 - ✓ A의 이익은 주주B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인가?
- 과세실무 : 소득과세(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적용)
- 경계 조정이 필요한 지점

2-3. 법인주주 간접이익에 대한 과세와 이중과세 조정

증여의 범위와 한계선에 관한 연구

❖ 법인을 매개로 이전된 주주의 증여이익의 본질

- 법인을 매개로 주주가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주주 소유의 **주식가치 증가분**으로 이해
- 주식가치의 증가액 = 법인의 잉여금 증가액
- 결국, 주주의 간접이익은 **미실현소득**의 성질을 띠



▶ 증여와 소득이 중첩되는 영역에 위치 ◀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조정 필요성

❖ 현행법상 증여과세와 소득과세의 이중과세 조정 내용

구분	증여 성질	증여세 과세와 조정 방식		
		법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포괄증여(6호)	중	비용 공제	조정 배제	조정 배제
재산가치증가	중	비용 공제	조정 배제	취득가액 가산
일감몰아주기	약	비용 공제	과세액 공제	취득가액 가산
일감떼어주기	약	비용 공제	과세액 공제	취득가액 가산
특정법인 거래	가	비용 공제	조정 배제	취득가액 가산

▶ 적용규정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 불균형하게 운용 ◀

2-4. 자기증여 조정 현황

증여의 범위와 한계선에 관한 연구

❖ 자기증여에 대한 조정 현황

- ✓ 주로 증여의제 규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일감몰아주기

- 자기증여 조정 연혁
 - ✓ 입법 당시 : 조정 규정 부재
 - ✓ 다음해 :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한해 조정
 - ✓ 2014년 개정 : 지배주주의 시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반영(과세 제외 매출액 = 매출액 x R)
- 자기증여 과세 문제 해소

일감떼어주기

- 자기증여 조정 내용
 - ✓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때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

- 현행법상 **자기증여 조정 규정 없음**
- 특정법인의 주주 자신이 특정법인에 증여하는 것을 "자기증여"로 해석
 - ✓ 서면-2016-상속증여-4883

3. 입법적 개선(안)

❖ 예시적 포괄증여 규정(6호)의 정비

- 증여의 개념과 후속 과세체계가 과세의 한계로 작동할 수 있을 정도의 일반원칙과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비
-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상증세법 제1항 제6호(현행)	정비(안)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에 따른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 시행령에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3. 입법적 개선(안)

❖ 법인의 소득처분에 대한 과세 정비

현행	정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주주가 아닌 자에 대한 소득처분 : 기타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변경 ▶ 소득과세에서 증여과세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이익 분여 : 귀속 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명확화 ▶ 소득과세에서 증여과세로 전환

3. 입법적 개선(안)

❖ 주주의 간접이익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일반 규정 신설

- 주주의 간접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조정(세액공제 방식)을 위한 일반 규정 마련
- 상증세법 제4조의3 (신설)

현행	정비(안)
(신설)	제4조의3(증여세와 배당소득세의 조 이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제42조의3, 제45조의5의 규정에 따라 영리법인의 주주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후 해당 법인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영리법인의 이익을 재원으로 주주등에게 배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증여세액을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차감한다. [산식 생략]

3. 입법적 개선(안)

❖ 자기증여 과세에 대한 조정

- 일감떼어주기 및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자기증여 조정 규정 마
- 일감떼어주기 또는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 규정에서도 이익을 부여한 법인과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주)가 동일한 경우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증여의제이익에서 제외 하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

Thanks for your attention

더피너클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발표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위탁 결산검증의 법적 실체와
수행 주체 다원화 방안

전북분회



한국세무사회

전북 분회

전북분회는 광주·전주 지역 세무사 5명이 모인 연구팀으로,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위탁 결산검증이 회계감사가 아닌 지방재정 통제 절차임을 대법원 2022추5125 판결을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이번 세법연구왕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대표 세무사



이종호 세무사

전북분회 대표

전북분회를 이끌며 지역세무환경 발전과 납세자 권익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전북을 대표하는 세법 연구 성과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팀원 소개



이종호 세무사



김지훈 세무사



유성태 세무사



이호수 세무사



송정아 세무사

-대법원 2022추5125 판결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위탁

결산검증 법적 실체와 수행 주체 다원화 방안

전북분회 연구팀

이종호 · 유성태 · 김지훈 · 송정아 · 이호수

연구 배경 (Problem Statement)

- 민간위탁 규모 확대 → 지방재정 통제 중요성 증가
- 대법원 2022추5125 판결 이후 → 민간위탁 검증 제도에 대한 조례 개정 논의 확산

민간위탁 결산검증을 둘러싼 프레임 충돌 "회계감사인가, 결산검사인가"

외부 인증(감사) 모델 (회계사 측)	재정 통제 모델 (세무사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검증 = 회계감사 ◦ 인증업무(Assurance) ◦ 공인회계사 전속업무 ◦ 외부감사법 논리(기업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검증 = 결산검사 ◦ 재정통제 절차 ◦ 수행주체 개방형 구조 ◦ 지방자치법 논리(행정중심)

대법원 2022추5125 판결 이후

민간위탁 결산검증은 기업 회계감사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관리·감독 절차

연구 질문 (Research Questions)

RQ1

민간위탁 결산검증의 **본질**은 무엇인가?

→ 기업 회계감사 vs 지방재정 결산검사

RQ2

민간위탁 결산검증의 수행 주체는 **특정 직역의 전속 업무**인가??

RQ3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 조례를 **어떤 법적 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하는가?

연구 방법 (Research Method)

- 규범 분석 (법령 체계 분석)
관련 법령 체계 분석 지방자치법 · 지방회계법 구조 검토
- 판례 분석 (대법원 2022추5125)
대법원 2022추5125 판결 법리 분석
- 비교입법 분석 (지자체 조례 사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 사례 비교
- 정책 효과 분석 (비용·인력·행정효율)
비용구조 · 인력활용 · 행정효율성

다층적 분석을 통해 민간위탁 결산검증 제도의 규범적 위치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

■ 검사·인증·감사의 규범적 구분

구분	검사 (Inspection)	인증 (Assurance)	감사 (Audit)
목적	재정통제	신뢰확인	재무정보 검증
대상	사업비 집행	특정 정보	재무제표 전체
결과	검증보고	확인서	감사의견
법체계	지방자치법	인증제도	외부감사법

민간위탁 결산검증 = 검사(Inspection)

→ 지방재정 통제 절차

■ 법체계 분석

지방자치법 · 지방회계법상 결산 통제 구조

- 지방자치법(법 제13조, 시행령 제83조)
 - 결산 통제 수단 → 결산검사
 - 감사위원 자격 → 세무사·공인회계사 병렬

- 지방회계법(법 제3조, 제14조, 제16조)
 - 적용 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부 회계
 - 민간 수탁기관 → 직접 적용 대상 아님

- 결론 → 민간위탁 결산검증은 회계감사가 아니라 검사 중심 결산 통제 절차

대법원 판례 분석

[대법원 2022추5125 판결의 핵심 법리]

- 법적 성격
민간위탁 결산검증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사무
- 수행 주체
특정 직역에 대한 전속 인정 어려움
- 조례 설계
지방자치단체는 통제 강도에 따라 선택형 구조 설계 가능
- 결론 → 민간위탁 결산검증을 관리·감독 사무로 법률 근거 없는 직역 독점 부정

비교입법 및 제도 확산

[최근 조례 개정은 “검사 중심 모델”로 확산하는 경향]

- 조례 설계 유형과 정합적 모델
 - 용어 정비형 ‘회계감사’ → ‘결산검사’ 또는 ‘사업비 정산검사’
 - 병렬 규정형 공인회계사·세무사를 병렬 규정
 - 포괄 개방형 재정·회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에게 개방
- 확산 과정의 문제
 - 회계감사 문언에 따른 경로의존
 - 검증 비용 구조의 왜곡
 - 형식적 감사와 실질적 감사의 이중 통제
- 정의-범위-주체-행정연계 패키지 설계

조례 설계 쟁점

회계감사 문언이 가져오는 위법 리스크

- 법률유보 문제 조례로 새로운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가?
- 위임 한계 문제 규칙으로 절차·대상·주체를 확장할 수 있는가?
- 자치입법 병존 문제 광역조례와 다르면 곧바로 기초조례가 위법한가?
- 법적 안정성 문제 판례 이후 다시 '회계감사'로 회귀하는 것이 가능한가?
- 결론→ 쟁점은 단순한 위법 여부가 아니라 조례 설계의 법적 정합성 문제

민간위탁 결산검증 통제 모델

구분	회계감사 모델	결산검사 모델
제도 성격	외부 감사(인증) 중심	지방재정(행정) 통제
검증 대상	재무제표 전체	위탁사업비 집행
수행 주체	공인회계사 중심(직역중심)	전문가 개방
정책 효과	비용 상승 가능	행정 효율성

민간위탁 결산 검증은 직역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 통제 방식의 제도 설계 문제

조례 설계의 경로 의존성 (Path Dependence)

- “단어 하나가 시장과 관행을 결정한다.”
- 경로 의존의 메커니즘

언어(조례 문언) → 관행(집행 방식) → 시장(전문직역 고착)

- ‘회계감사’ 문언의 영향
수행주체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실무는 외부감사 모델로 수렴
- 결과
→ 회계사 중심 관행 고착, 수탁기관의 행정 부담 가중, 비용 구조의 왜곡(단가 상승)을 초래

지방의회의 정치적 제어: 전주시 사례 분석

“정치적 위험 관리와 책임 귀속의 문제”

- 전주시의회 심의 과정의 특징:
책임 회피 기제: “상위법 개정이 국회 계류 중인데 우리가 먼저 바뀌어도 되나?”라는 **사후 책임에 대한 우려**.
- 비공식 기준(Reference Point): 서울, 경기도 등 타 지자체의 분쟁 사례를 ‘법적 실험’이 아닌 **‘정치적 리스크’로 인식**.
- 분석 결과: **법리적 정합성보다 정치적 안정성을 우선**하여 조례 개정을 보류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 발생.
- 시사점: 대법원 판결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 프레임’이 주는 심리적 압박이 자치입법권을 제약**하고 있음.

수행주체 다원화의 기대효과 (Benefit)

- 비용 구조 합리화

1
수행주체 독점 구조를 완화하여 검증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검증 비용 부담을 완화

- 검증의 정밀도 향상

2
세무 전문가 참여를 통해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세무 처리의 합법성 등 세출 구조에 대한 정밀 검증 가능

- 지역 전문 인력 활용

3
지역 내 전문가 활용을 통해 행정 소통 비용 감소 및 검증 접근성 향상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 (Action Plan)

- 용어 정비: '회계감사' → '사업비 정산검증' 또는 '결산검사'로 변경.
- 주체 확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로 명기.

“결론”

민간위탁 결산검증은 외부감사법상 회계감사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통제를 위한 결산검사”

따라서 조례 설계는 지방재정 통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 검사중심 통제 구조를 유지하고
- 수행주체를 선택형으로 설계하며
- 검증 결과를 환수·시정·예산반영 등 행정조치와 연계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전북분회 연구팀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발표

로켓랩(RKLB)사태를 통한 해외주식 기업결합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팀삼성(Team Samsung)



한국세무사회

TEAM SAMSUNG

TEAM SAMSUNG은 서울 삼성 지역 세무사 3명이 뜻을 모은 연구팀으로, 로켓랩(RKLB) 사태를 계기로 500만 서학개미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해외주식 기업결합 시 양도소득세 즉시 과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자 이번 세법연구왕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대표 세무사



김동휘 세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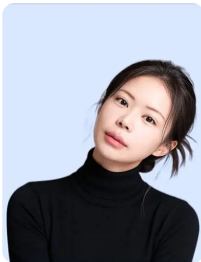
팀 삼성 대표

팀 삼성을 이끌며 세법 연구의 깊이와 실무 적용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팀원들과 함께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팀원 소개



김동휘 세무사



권유나 세무사



임지강 세무사

발 제 주 제

로켓랩(RKLB)사태를 통한 해외주식 기업결합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TEAM SAMSUNG

CONTENTS

- 01 개요
- 02 쟁점
- 03 주변국 세제 비교
- 04 대안 및 결론

01 | 개요

- 01. 배경
- 02. 사실관계
- 03. 국민들 피해 발생
- 04. 걱정되는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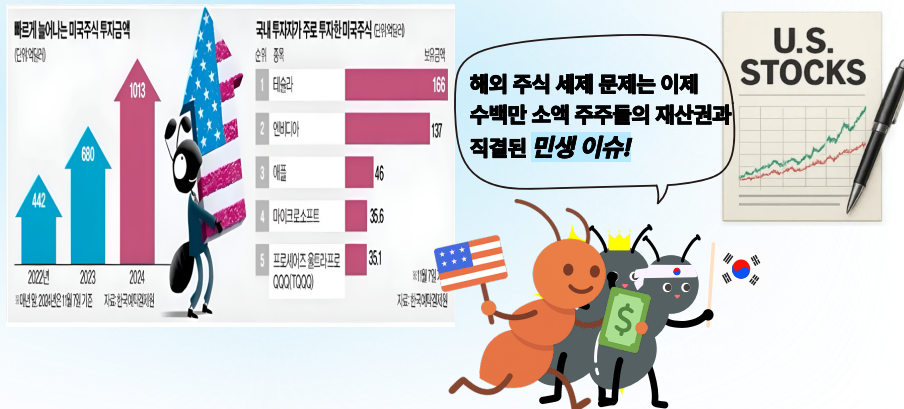
01 개요

01 배경

- 02 사실관계
- 03. 국민들 피해 발생
- 04. 걱정되는 미래

로켓랩 사건의 배경

서학개미의 폭발적 증가



02 개요

01. 배경

02 사실관계

03. 국민들 피해 발생

04. 걱정되는 미래

로켓랩 사건의 본질

사건의 전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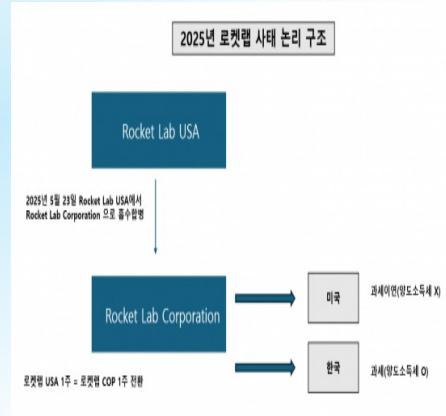
한국 투자자 양도세 문제 발생

로켓랩 지주사 전환
방식: 지주사 신설 및 기존 법인 100% 자회사 편입.

주식: 구주 1주 → 신주 1주 자동 전환 (티커/거래 동일).

미국 세무: 주식 교환(Stock Swap)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쟁점: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 이를 '강제 매도 후 재매수'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과



02 개요

01. 배경

02 사실관계

03. 국민들 피해 발생

04. 걱정되는 미래

로켓랩 사건의 본질

기재부 해석(사전-2025-법규재산-0462) 행정편의적인 자구적 해석

판단: 로켓랩 주식 전환을 '양도'로 간주.

결과: 실현 수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정.

시한: 국내 투자자는 2026년 5월까지 세금 신고 및 납부 필수.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462		
납세지정번호	법규과-1963	세목	양도소득세
생신일자	2025. 08. 27.	귀속연도	
제목	미국법인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이 완전모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여부		
요지	미국법인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A주식이 B주식으로 전환된 것은 양도에 해당함		

02 | 쟁점

- 01. 양도인지 여부
- 02. 실질과세원칙과 충돌
- 03. 재산권 보호와의 관계

01 쟁점


01 양도인지 여부


- 02 실질과세원칙과 충돌
- 03. 재산권 보호와의 관계

이것이 진정한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에 대한 법리적 재검토

1. 양도의 일반적 전제 (Principles)

자발적 처분: 소유자의 자유 의사에 기한 자산 이전 

경제적 이익의 실현: 처분을 통한 현금화 또는 실질적 이득 발생 

2. 로켓랩 구조의 특수성 (Facts)

강제적 자동 전환: 주주 의사와 무관한 지주사 체제 개편

처분권의 부재: 매도 선택권 없이 주식의 '명칭'만 변경

투자의 연속성: 실질적으로는 동일 기업에 대한 '계속 투자' 상태

01 쟁점

01 양도인지 여부

02 실질과세원칙과 충돌

03. 재산권 보호와의 관계

이것이 진정한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에 대한 법리적 재검토

구분	일반적인 양도	로켓랩 사례
의사결정	주주의 자발적 매도	비자발적 자용 전환
경제적 실질	현금 유입 (이익 실현)	미실현 이익 (계속 보유)
과세 적절성	적합	재검토 필요 (형식주의 폐해)

02 쟁점

01. 양도인지 여부

02 실질과세원칙과 충돌

03. 재산권 보호와의 관계

실질과세 원칙과의 정면 충돌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경제적 실질 검토

1. 실질과세 원칙의 본질 (Tax Principle)

국세기본법 제14조: 형식적인 명칭이나 외관보다 '경제적 실질'을 우선하여 과세.

입법 취지: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담세력(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맞는 공정한 과세 실현.

2. 로켓랩 주식교환의 '경제적 실질'

투자의 연속성: 주주의 자산 구성에 실질적 변화 없음 (A기업 주식 → A기업 지주사 주식).

미실현 이익: 현금화되지 않은 '장부상 수치'에 불과함.

담세력 부재: 세금을 낼 현금이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 강행.

02 쟁점

01. 양도인지 여부

02 실질과세원칙과 충돌

03. 재산권 보호와의 관계

실질과세 원칙과의 정면 충돌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경제적 실질 검토

구분	형식적 해석 (기재부)	실질적 해석 (주주/법리)
판단 기준	법인격의 변동 (구주 소멸/신주 취득)	경제적 가치의 동일성 유지
과세 시점	주식 전환 시 즉시 과세	실제 현금화(매도) 시 과세
결과	미실현 이득에 대한 징벌적 과세	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과세 이연

03 쟁점

01. 양도인지 여부

02. 실질과세원칙과 충돌

03 재산권 보호와의 관계

재산권 보호와 헌법적 통제

비자발적 조세부담에 따른 과도한 사익 침해 검토

1. 헌법적 근거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과잉금지 원칙: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2. 침해의 본질

담세력 부재: 현금 유입 없는 상태에서의 강제 과세

비자발성: 주주 의사와 무관한 외부 요인에 의한 세부담

이중 손실: 세금 납부를 위한 '강제 주식 매도' 발생 → 장기투자자 입장 미래 이익까지 포기

03 쟁점

- 01. 양도인지 여부
- 02. 실질과세원칙과 충돌
- 03. 재산권 보호와의 관계**

재산권 보호와 헌법적 통제

비자발적 조세부담에 따른 과도한 사익 침해 검토

구분	공익 (과세 관청)	사익 (투자자)
판단 기준	조세 수입 확보 및 형식적 법 집행	재산권 유지 및 투자의 연속성
과세 시점	세수 증대 효과 미미	가계 자산의 심각한 훼손
결과	행정 편의적 성격 강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03 | 주변국 세제 비교

- 01. 미국의 사례
- 02. 일본의 사례
- 03. 한국의 한계점

01 주변국 세제 비교

01 미국의 사례

02. 일본의 사례

03. 한국의 한계점

미국의 재조직(Reorganization) 제도

IRC § 368에 따른 실질 중심의 과세 체계

핵심 원칙: 기업 재편을 수익 실현이 아닌 **투자 연속성**의 과정으로 평가

과세 구조: 주식 대 주식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비실현 거래(Non-recognition)**로 간주

주요 요건: * 소유 연속성: 기존 주주가 신설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는가?

사업 연속성: 재편 후에도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유지되는가?

시사점: 형식적 소유권 변경보다 경제적 실질의 동일성을 중시하여 즉시 과세보다 이연 중심으로 설계

02 주변국 세제 비교

01. 미국의 사례

02 일본의 사례

03. 한국의 한계점

일본의 적격 조직재편 제도

기업 갱생과 주주 보호의 조화

핵심 정책: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 시 세제 지원

과세 특례: '적격 요건' 충족 시 법인 및 주주 단계에서 양도세 과세이연 허용

제도적 특징: 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등 다양한 재편 방식에 유연하게 대응

기업재편 촉진과 조세형평성 사이의 합리적 조화 추구

시사점: 소액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투자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입법 모델

03 주변국 세제 비교

01. 미국의 사례

02. 일본의 사례

03 한국의 한계점

한국 제도의 한계: 갈라파고스적 과세

글로벌 투자 환경을 외면한 국내 중심적 과세 체계

내국법인 중심의 율타리:

조특법 제38조의 한계: 과세특례가 **국내 기업** 간 주식교환에만 한정됨.

해외주식 배제: 거래 본질이 동일해도 해외 상장주식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소외.

과세 결과의 불평등:

국내 거래는 '이연', 해외 거래는 '즉시 과세'라는 불합리한 **역차별 발생**

미국·일본 투자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때, **한국 투자자만 '강제 양도세' 부담**

현실 반영 부족:

서학개미 500만 시대, 해외 기업의 역동적인 재편(로켓랩 사태 등)에 무방비로 노출.

⚠️ 글로벌 자본시장과의 비동기화가 국민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04 | 대안 및 결론

01. 제도 개선 방향

02. 결론

01 대안 및 결론

01 제도 개선 방향

02. 결론

제도 개선의 방향: 'K-세제'의 현대화

해외주식 과세이연 특례 도입 및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

해외주식 과세이연 전격 도입:

조특법 제38조 확장: 적용 범위를 ["해외 상장법인 간의 주식교환"]까지 명문화.

외국법인 포함: 합병·주식교환 시 거주자의 과세 시점을 실제 매도 시로 이연.

합리적 적격 요건 설정:

주식대가 비율: 교환 대가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주로 교부받을 것.

보유·사업 계속성: 재편 후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고 실질적 사업을 유지할 것.

기대 효과:

미실현 이득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지 및 국민 재산권 보호.

테슬라 등 거대 기업 재편 시 발생할 금융시장 혼란의 선제적 차단.

02 대안 및 결론

01. 제도 개선 방향

02 결론

조세 정의의 실현

비자발적 과세를 넘어, 납세자가 신뢰하는 미래로!

1. 3대 기대효과 (Expected Effects)

투자자 재산권 보호: 비자발적·징벌적 과세 문제를 해소하여 국민 자산 손실 방지

조세 형평성 제고: 국내외 주식 간 과세 불균형을 타파하고 실질과세 원칙 구현

시장 예측 가능성 회복: 거대 기업(테슬라 등)의 재편 시 발생할 시장 혼란 선제적 차단

2. 정책적 결론 (Conclusion)

입법의 시급성: 로켓튕 사태는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닌, 현행 세제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낸 신호탄입니다.

K-세제의 현대화: 글로벌 투자 500만 시대, 우리 세법도 외형적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경제적 실질을 수용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과세이연 도입: 실제 수익 실현 시점에 과세하는 '합리적 이연 구조' 마련이 조세 정의의 완성이입니다.



“실질에 맞는 법령 정비, 그것이 진정한 글로벌 'K-세제'로 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TEAM SAMSUNG

세무사김동휘
세무사임지강
세무사권유나